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정치권력 연구

2010. 11

연구기관: 서강대학교

연구책임자: 류석진(서강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허정수(서강대학교 박사수료)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정치권력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1. 30

연 구 기 관 : 서강대학교

연 구 책 임 자 : 류석진(서강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원 : 허정수(서강대학교 박사수료)

목 차

요약문	5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9
1. 정치적 관점에서의 권력 연구 필요	9
2. 사회갈등의 해소 방안 모색	10
3. 권력 작동방식에 대한 유형화	11
제 2 절 연구목적	12
1. 다차원적인 권력 개념 분석	12
2. 권력 작동방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	15
3. 정치제도 ·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 탐구	17
제 3 절 연구내용	18
1.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 개념 연구	18
2. 행위자에 따른 권력작동방식 구조 분석	19
3. 정치제도와 정치의식 수준에서의 권력 재구조화 과정 분석	20
제 4 절 연구 방법 및 대상	21
1. 연구 방법	21
2. 연구 대상	21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가설	25
제 1 절 권력 정상화 가설과 변화 가설	25
제 2 절 연구 가설: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의 권력 개념	26
제 3 장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형성 과정	33
제 1 절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원인: 자원과 수단	34

1. 제도 권력	35
2. 비제도 권력	45
제 2 절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과정	62
1.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에 대한 반응	63
2.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관계: 수평적 권력인가, 수직적 권력인가?	67
3.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성공	71
제 3 절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결과	74
1.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과 제도	74
2. 권력의 재구조화	80
제 4 장 정치의식과 시민참여, 정치조직 그리고 정책결정	83
제 1 절 정치의식과 시민참여	83
1. 컨버전스 세대 개념과 조사 개요	83
2. 정치의식과 시민참여	86
제 2 절 정치조직의 변화	97
1. 정부 · 정당 · 시민사회의 변화	98
2. 정치조직의 전략	105
제 3 절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118
1. 정책네트워크의 구조	118
2.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121
제 5 장 결론: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미래와 과제	126
제 1 절 연구결과	126
제 2 절 시사점	129
1. 제도 영역에서의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작동	129
2. 비제도 영역에서의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작동	129
3.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미래와 과제	130
참고문헌	132

표 목 차

〈표 1-1〉 주요 연구 내용	18
〈표 1-2〉 세계 주요 SNS 업체 현황 및 성장률	22
〈표 3-1〉 블로그와 전통 언론 매체 간 이슈 비교	48
〈표 3-2〉 트위터 주제별 이슈	50
〈표 4-1〉 ICT 활용세대와 시민의식의 차이	86
〈표 4-2〉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87
〈표 4-3〉 시민성 측정 문항	87
〈표 4-4〉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89
〈표 4-5〉 시민단체주도의 대중 시위에 참여하기	92
〈표 4-6〉 정부 TAH 전략의 특징	105
〈표 4-7〉 네트워크 정당의 TCAHR 전략의 특징	111
〈표 4-8〉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TCAH 전략의 특징	115
〈표 4-9〉 디지털 융합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주요 특성	118

그 립 목 차

[그림 3-1] 트위터의 감시도구화 사례 1	42
[그림 3-2] 트위터의 감시도구화 사례 2	43
[그림 3-3] 제도 권력의 권력 생산 과정	52
[그림 3-4] 비제도 권력의 권력 생산 과정	53
[그림 3-5]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발전	75
[그림 3-6] (트위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제도의 부재	77
[그림 3-7] (트위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신뢰 높은 제도의 형성	79
[그림 4-1] 정치의식 조사 설계도	85
[그림 4-2] ICT 활용세대와 시민성	88
[그림 4-3] ICT 활용세대와 오프라인 참여효능감	90
[그림 4-4] ICT 활용세대와 사회의식	92
[그림 4-5] ICT 활용세대와 관습 참여행태 단순비교	94
[그림 4-6] ICT 활용세대와 비관습참여행태 단순비교	96
[그림 4-7] ICT 활용세대와 참여유형별 평균비교	97
[그림 4-8] 트위터의 정보교환 경로	120

요 약 문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컨버전스 기술의 진화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결국 정치권력의 수준에서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데, 이에 따라 컨버전스적 변화가 정치권력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고 하겠다.

그간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들 중 정치권력의 관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져온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기존의 권력 관계 및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사회의 안정 및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오늘날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추론해 보았다.

□ 주요 연구 내용

1. 다차원적인 권력 개념 분석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정치권력의 작동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권력 개념에 대한 정치학적 개념들을 활용하여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행태적인 수준에서는 각 권력의 주체별로 점유하고 있는 권력 자원과 권력 수단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각각의 권력 주체에게는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관계적인 수준에서는 권력 당사자들 쌍방을 매개하는 제도의 현주소 및 그것

의 함의를 분석해 보았으며, 당위적인 수준에서 오늘날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안해 보았다. 끝으로 권력을 재생산하는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하여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을 가설적인 수준에서 정의해 보고, 그것의 한계와 나아갈 바를 제안해 보았다.

2. 권력 작동방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

권력은 권력수용자에게 단순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권력수용자의 행위와 판단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가 현재진행형임을 감안하여, 몇몇 제한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저러한 주장을 선불리 단언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트위터와 같은 SNS가 정치적 수준에서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한 사례 분석을 넘어, 트위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성격 및 그것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트위터 등이 기존의 권력 수단들과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권력 관계와 구조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지를 경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3. 정치제도 ·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 탐구

권력을 둘러싼 환경과 작동방식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권력 당사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이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요구 혹은 야기하기 마련이다. 만약 의식과 제도가 불일치 할 경우, 그리고 그러한 간극이 지속될 경우 사회 내 권력 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신뢰의 정도는 낮아질 것이며, 이것은 결국 권력 당사자들 쌍방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 자체를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의식과 제도 간 불일치와 그것의 방치는 차후 권력의 작동방식을 구조적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경로 자체를 심하게 왜곡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

대에 존재하는 의식과 제도 간의 간극의 정도를 살펴보고, 권력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고양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각각의 권력 주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론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자발적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사회적 신뢰가 심화되고, 정부가 제도를 통해 이것의 재생산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민주적 협치가 가능해진다. 반면 정부가 사회적 신뢰가 재생산되는 데 있어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일부 시민들은 국가의 제도가 자신들을 불편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전체적인 수준에서 신뢰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네트워크가 보다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사실 이것은 정보화 이후 정당의 대의기능 약화로 인해 가중된 국가 자신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시민들은 이미 정부의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많은 일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결코 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의 형성은 국가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잉여 자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고양시킬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정치적 관점에서의 권력 연구 필요
- 사회갈등의 해소 방안 모색
- 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유형화

1. 정치적 관점에서의 권력 연구 필요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연구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 기술·산업적 차원에서 컨버전스의 의미를 분석하던 수준에서 차츰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진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작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출발이 늦었다는 점에서 정치학 내에서 컨버전스 관련 연구들이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분석의 초점은 여전히 정치적이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이슈들에 맞춰져 있는데, 이는 정치 영역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디지털 컨버전스를 다룬 예가 없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물론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의 ‘권력 관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 변화 양상을 대략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기존의 수직적인 권력 관계가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해 수평적인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거나(또는 변화될 것이라거나), 혹은 컨버전스 격차(convergence divide) 등으로 인해 기존의 위계적 권력 구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정도의 이분법적인 주장이 그것이다. 많은 논의들이 저마다 높은 추상 수준

에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정작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어떤 권력의 원인’이 ‘어떤 권력의 과정’을 통해 ‘어떤 권력의 결과’에 이르고 있는지를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컨버전스 사회가 아직 변화 중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런 주장들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견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컨버전스 사회가 권력의 구조적 속성, 수단, 주체 및 권력 관계에 미친 영향을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사회갈등의 해소 방안 모색

기술의 변화는 사회 변화를 야기한다. 사회 변화는 이익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바꾸고 권력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즉 사회 변화와 갈등은 근본적으로 권력 관계로 귀착된다. 권력 주체들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다양한 이익과 갈등을 어떻게 포섭하고 해소하는가에 따라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것은 기존의 사회 구조 내에서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를 비롯한 기성 권력 주체들의 변화 수용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만약 국가를 비롯한 기성 권력 주체들의 인식 및 이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사회 제도가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사회내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 사항은 제도의 외부경로를 통해 표출되거나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우 사회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권력 주체들 간의 합의를 통해 사회의 변화상을 포착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일은 사회 갈등을 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새로운 환경 하에서 권력의 작동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층적인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권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하며, 나아가 권력 주체 간 소통과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 하에서의 권력의 속성 변화와 그로 인한 권력 관계의 변화, 나아가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디지털 컨버전

스가 가진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연구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다.

3. 권력 작동방식에 대한 유형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권력 개념과 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권력이란 다양한 주체들 간의 ‘복잡한 얽힘(complicated involving)’인 까닭에 단순한 도식을 통해 그것의 변화 양상을 추론해 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주체를 동원하며,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행사되고 또 수용된다. 이런 점에서 권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일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각 주체별로 점유하고 있는 상이한 권력 자원에 따라 그들의 권력작동방식을 분류할 수 있다. 컨버전스 사회 하에서 권력의 작동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권력 주체별로 오늘날 어떤 권력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각 주체별로 점유하고 있는 상이한 권력 수단에 따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권력 수단이란 권력 주체의 권력을 권력대상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권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기성 권력 주체들은 제도를 통해 그들의 권력을 행사한다. 제도는 권력 행사를 합법화시키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자, 기존의 권력 관계를 강화 혹은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성 권력 주체들에게 있어 제도는 매우 효율적인 권력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제도는 미시적 권력 주체들에게도 권력을 행사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 그러나 컨버전스 시대 이후 미시적 권력 주체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권력 수단이 된 것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컨버전스 기기들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러한 권력 수단들은 폐쇄적인 단일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아닌, 다양한 ICT 융합을 통한 개방적인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권력 수단의 등장은 권력 자원을 동원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하향적이고 일방적인 동

원에 근거한 기존의 방식’을 ‘상향적이고 자발성에 근거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셋째, 권력의 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권력 구조란, 어떠한 권력으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등을 미리 결정하는 구조적 힘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과거의 권력 구조는 주로 국가나 정당 등의 제도적 영역 혹은 기성 권력들에게 유리한 형태였지만, 이제는 비제도적 영역 혹은 미시적 권력 주체들의 권력의 작동을 가능케 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구조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권력 구조의 관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에서의 권력을 이해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2 절 연구목적

- 다차원적인 권력 개념 분석
- 권력 작동방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정치제도 · 의식에 미친 영향 탐구

1. 다차원적인 권력 개념 분석

권력은 ‘주체’를 호명한다. 다시 말해 권력은 주체를 통해 행사되고, 주체에 대해 행사된다. 따라서 권력은 일차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가 가져온 변화로 인해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혹은 새로운 사회 변화 속에서 누가 권력의 주체로 부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권력을 행태적인 수준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권력은 동시에 ‘관계(relation)’이다. 여기서 권력을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권력행사자와 권력수용자, 그 양자를 관계 지우는 개별적 · 사회적 관계가 양자 사

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력을 개별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곧, 어떤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 간의 ‘특정한 권력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선 최소한 둘 사이의 ‘연결고리(connection)’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Dahl 1957, 204).

이러한 연결고리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자 간 ‘이해관계(interests-relation)’이며, 두 번째는 ‘제도(institute)’이다. 여기서 ‘제도’가 비가시적인 권력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출시키는 일종의 통로(route)라고 한다면, ‘이해관계’란 권력행사자 A(갑)가 권력수용자 B(을)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혹은 반대로 권력수용자 B(을)가 권력행사자 A(갑)의 권력을 수용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우선 ‘이해관계’에 대해 언급해 보자면, 고대의 권력관계는 권력행사자와 권력수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부족했다. 권력수용자로 하여금 누군가의 권력을 수용하게 만드는 일종의 유인책이 부족했던 것이다. 각 주체들은 서로가 자립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했던 탓에 타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그들 스스로 어떠한 명령이나 권위에 복종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고대의 권력 행사를 폭력수단을 동원한 강압적인 방식에 근거하도록 만든 주된 이유가 된다(Giddens 1991, 49-78).

반대로 근대를 전후한 시기, 제도와 지식을 통한 합리적인 형태의 권력작동방식이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인한 사회 내부의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이해관계가 증대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개별적인 사적 이익의 추구와 사회적 부의 증대’ 간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와 권위 혹은 권력을 그들 스스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권력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의 증대는 권력의 작동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권력의 행사와 수용이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전근대적인 폭력과 강압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¹⁾ 그 빈자리를 합법성, 보

1) 그렇다고 해서 근대, 그리고 탈근대에 들어 폭력과 강압성을 동반한 전제적인 권력 작동방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와 지식을 통한 합리적인 권력작동

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권력행사와 지배의 형태라고 할 제도가 매우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개별적인 관계에 그쳤던 것이 ‘사회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개별적 관계를 사회 내로 포섭해야 할 필요성이 또한 제기된다. 이것은 권력이 더 이상 권력 당사자 간의 단순한 개별적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도’는 바로 그러한 권력 당사자들 간의 개별적 관계를 사회 내로 포섭한 구체적 형태이자, 권력의 행사와 수용을 합법성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다. 나아가 ‘제도’는 그것이 ‘관습’화될 경우 일종의 ‘구조적 힘’을 또한 행사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 하에서는 제도를 통한 권력의 행사가 갖는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렇게 볼 때 권력이 표출되는 매개체로서의 ‘제도’에 대한 분석은 권력 분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단순히 행태적인 수준에서 힘을 행사하거나, 혹은 제도 등을 통해 자신을 표출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은 이른바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을 또한 행사한다. 즉 권력행사자 A(갑)는 권력수용자 B(을)의 ‘선택의 폭’ 자체를 좁히거나 ‘의식’을 주조함으로써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권력수용자 B(을)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준자발적(quasi-voluntary)²⁾으로 선택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다(Lukes 1992, 44-45). 나아가 권력 당사자들(즉 A와 B)은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는 ‘구조적 권력’³⁾에 둘러싸여

방식과 폭력과 강압성을 통한 전제적인 권력작동방식은 상호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Foucault 1991, 136-137).

2) 여기서 말하는 ‘준자발적 동의’란 레비(Margaret Levi)의 개념으로, 레비는 조세정책과 그것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행위 분석을 위해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준자발적 동의’란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통치자로 하여금 어떤 정책의 집행비용을 줄이게끔 만드는 방법일 수 있는 방법을 뜻한다. 다만 ‘준자발적 동의’는 납세자가 통치자 및 다른 행위자가 협상 내용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때에 발생하며, 나아가 납세에 불응할 경우 어떤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레비는 여기에 ‘준(quasi)’이라는 한정어를 붙였다(Levi 1988, 52-55).

있기 마련이다(Strange 1988, 23-25).

이처럼 권력이란 단순한 개별 주체와 개별 주체 간의 일면적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분석 역시 단순한 일면적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게다가 권력은 특수한 시·공간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까닭에, 어떠한 고정적인 시각과 관점을 통해 파악되어서도 안 된다. 권력은 그것을 호명하는 주체, 그리고 사회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를 겪는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분석 역시 그와 더불어 생동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권력에 대한 분석은 다차원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와 동시에 그것의 변화상을 면밀히 포착하기 위한 과학적, 그리고 경험적인 분석을 또한 요구하는 것이다.

2. 권력 작동방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정보화 이후 권력의 작동방식을 연구한 많은 논의들은 대부분 선형적이거나 논리적인 수준에서 이러저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보나 지식을 통해 행사되는 권력의 양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러한 권력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를 파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스트레인지 역시 이런 관점에서 지식과 관련된 권력의 형태를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Strange 1988, 115). 더군다나 컨버전스 사회와 관련하여서는, 작금의 시기가 컨버전스 사회로 이제 막 진입하고 있는 일종의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일관된 결과나 성과를 경험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단일 사례나 몇몇 제한된 사례에 근거하여 이러저러한 주장을 선불리 단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 정치권 내에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정치 선거 등에 활용하는 빈도

3)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권력이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자체를 규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는 권력을 뜻한다(Strange 1988, 23-32).

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트위터(twitter)를 통한 선거 참여 독려가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였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트위터’와 같은 SNS가 컨버전스 사회의 권력 작동방식과 권력 구조 자체를 개방적·수평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성 권력들은 트위터와 같은 SNS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기성 정치인들이 트위터와 같은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그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SNS로 인해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이러저러한 정책 변화가 과연 트위터와 같은 SNS 때문인지 아닌지, 나아가 기성 권력들의 SNS 활용이 기존의 권력 관계와 구조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는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즉 최소한 트위터와 같은 SNS가 정치적 수준에서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한 사례 분석을 넘어, 트위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성격 및 그것의 함의가 무엇인지, 나아가 트위터 등이 기존의 권력 수단들과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분석 자체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어려움 및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 문제로 인해 그 자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최근 정치학 외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하나씩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이들 연구들이 정치학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본 논의에 활용할 수 있는 엄밀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연구 성과들을 정치학적으로 재해석할 경우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 하에서 권력의 작동방식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의 경험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성격을 분석한 뒤, 나아가 그것이 기존의 미디어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 구조의 변화 여부를

추론해 볼 것이다.

3. 정치제도 ·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 탐구

다차원적인 권력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 하의 권력의 작동방식을 분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날 행위자들의 정치의식과 제도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혹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정치제도와 정치의식은 권력과 관련하여 일종의 ‘구조적 힘’을 갖는다. 그것이 ‘구조적 힘’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 행사되고 있는 권력의 작동방식을 규정한다는 차원을 넘어, 그것이 앞으로 행사될 권력의 작동방식 또한 규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제도는 앞으로 행사될 권력행사자들의 권력을 그 제도가 지시하는 특정한 방식에 머물게 하는 구조적 힘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정치의식은 권력수용자들로 하여금 권력을 수용하거나 혹은 반발하는 자기준거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각 권력주체들 간의 갈등이 제도와 정치의식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권력의 작동방식을 추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획득한다고 하겠다.

물론 컨버전스 사회로의 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어떠한 결론을 근거로 하여 정치제도, 특히 정치의식 수준에서의 변화의 방향성을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최소한의 수준에서 어떤 변화의 패턴이 감지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변화가 결국 권력에 대한 ‘구조적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치의식과 제도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선험적인 수준에서나마 추론해 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의 권력의 작동방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선행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제3 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정치권력의 변화상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 개념 연구
 - 행위자에 따른 권력 작동방식 분석
 - 정치제도·정치의식 수준에서의 권력 재구조화 과정 분석

〈표 1-1〉 주요 연구 내용

구분	주요내용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 개념 연구	기존 권력 개념에 대한 디지털 컨버전스적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권력 개념을 가설적 수준에서 제시
행위자에 따른 권력작동방식 분석	주체별로 점유하고 있는 권력 자원 및 수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컨버전스 하의 권력작동방식 분석
정치제도와 정치의식 수준에서 권력 재구조화 과정 분석	정치제도와 정치의식 변화 및 이를 통한 권력 재구조화 과정 분석

1.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 개념 연구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하에서의 ‘권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정치학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권력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의 분석 개념들은 달(Robert Dahl)의 그것을 활용할 것인데, 달의 ‘권력’에 대한 정의는 ‘권력’의 행태적인 속성과 형식적인 면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달의 ‘권력’에 대한 정의들을 활용할 경우 권력의 변화된 양상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직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예컨대 달은 권력을 자원과 수단의 측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과 성공적인 작동의 측면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해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Dahl

1957, 205-206). 이것은 컨버전스 사회 하에서의 권력의 양상이 그것의 ‘원인’과 ‘결과’의 수준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달의 개념들은 ‘권력’을 둘러싼 ‘제도’와 ‘구조’의 양상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권력’의 ‘관계적 속성’과 ‘구조적 속성’에 주목한 카스텔(Manuel Castells)과 룩스(Steven Lukes), 스트레인지(Susan Strange) 등의 개념을 활용해 이를 보완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틀을 활용할 경우, 컨버전스 사회 하에서의 권력이 그것의 자원과 수단, 그리고 반응과 결과의 차원에서 이전 시대와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또 연속성을 지니는지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행위자에 따른 권력작동방식 구조 분석

베버 이후 많은 학자들은 폭력과 강제에 기반을 둔 ‘전통적 지배’(혹은 전근대적 지배)’가 ‘합리적 지배’(혹은 근대적 지배)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식과 제도를 통한 합리적인 통치가 근대국가의 주요 운영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지적한다(Weber 1968, 266-283; Mann 1993; Giddens 1991; Foucault 1991; Hay · Lister 2006, 7-8).

지식과 정보는 민주주의의 성장 및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권력자원으로서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Strange 1988; 조대엽 2000; Castells 2003; 김상배 2008), 권력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기성 권력들에 비해 개인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새로운 세력의 부상과 친화성을 갖는다고 평가된다(김상배 2008, 31; 정기웅 2008, 18-19). 나아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대중화와 공유를 기술적인 수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만듦으로써 권력 자원으로서의 ‘정보’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 ‘권력 자원’으로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비단 컨버전스 사회만의 특징은 아니다. 다른 말로 ‘정보화 시대’ 이후 ‘권력 자원’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온 만큼, 이제는 다른 관점과 다른 추상 수준에서 새롭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이후

‘정보의 대중화’와 ‘공유’가 꾸준히 진전된 만큼, 이제 논의의 초점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대부분의 권력 주체들은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주요 권력 자원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지식’과 ‘정보’를 권력 자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그것을 활용하는 통로인 권력 수단 역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통해서는 ‘정보화 시대’와는 다른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주체별 권력 작동방식의 차별성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정보 그 자체’보다는 ‘어떤 정보’가 ‘권력 자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늘날 ‘어떤 정보’가 어떤 주체들에게서 ‘권력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주체별로 권력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보’와 ‘지식’의 종류가 상이하다면 그것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논의의 수준을 구체화 시키는 것은 디지털 컨버전스 하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상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 하에서의 ‘권력 관계’와 그 ‘작동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치제도와 정치의식 수준에서의 권력 재구조화 과정 분석

‘권력’을 둘러싼 환경과 작동방식의 변화는 권력 당사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제도적인 수준에서 변화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이 때 권력 수용자인 B(을)의 의식 수준과 제도가 불일치할 경우, B(을)의 요구는 비제도적인 루트를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사회는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데 ‘의식’과 ‘제도’ 간 간극의 해소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결국 이것이 사회 내 권력 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신뢰의 정도를 관습화하게 되어, 차후에는 이러한 ‘관습화된 신뢰의 정도’가 권력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 자체를 사전적으로 규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의식’과 ‘제도’ 간 불일치와 그것

의 방치는 차후 권력의 작동방식을 구조적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경로 자체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식’과 ‘제도’ 간의 간극 및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재구조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권력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고양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제4절 연구 방법 및 대상

1. 연구 방법

큰 틀에서 본 연구는 기존 정치학 내의 이론틀을 활용하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취할 것이며, 논의의 보완을 위해 경험적인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사례분석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본 연구는 달의 권력에 대한 개념틀을 활용하여 컨버전스 사회하의 권력의 작동방식을 그것의 ‘원인’과 ‘결과’의 수준에서 각각 접근해 보고, 그 의미를 분석할 생각이다. 다만 달의 개념틀로는 권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달과는 다른 관점에서 권력을 정의한 몇몇 학자들의 논의를 또한 활용할 생각이다. 나아가 이론적인 접근에서 오는 논의의 선형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분석 및 선행 연구들의 경험적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2. 연구 대상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로의 진입 이후 지금 세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FaceBook), 그리고 마이스페이스(MySpace)와 같은 SNS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와 젊은 세대에 국한하여 유행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계층·세대·지역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트위터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SNS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어 최근 그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중이다.

가입자 수로만 따진다면, 이들 SNS 가운데 으뜸인 것은 단연 페이스북이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페이스북은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ERIB 2010, 2). 국내의 경우, 2010년 10월 현재 토종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라고 할 수 있는 미투데이(me2day)의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모바일 SNS의 대표 주자인 트위터는 전 세계 가입자 수가 페이스북에 못 미치는 1억 5천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엔 17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미투데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장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 SNS 중에서는 단연 트위터가 으뜸인데, 예컨대 페이스북의 2008-09년 성장률이 137%인데 반해, 트위터의 성장률은 1,238%에 이른다. 국내 역시 미투데이가 2010년 3월 100만 명이었던 사용자 수가 최근 200만 명을 넘어 지난 6개월 동안 100%의 성장률을 보인데 반해, 트위터는 2010년 3월 20만 명에 불과했던 사용자 수가 최근엔 170만 명을 넘어 60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1-2〉 세계 주요 SNS 업체 현황 및 성장률

구분	설립연도	사용자 수 (백만명)	성장률(%)	인기 지역
Facebook	2004	500	137	전 세계
MySpace	2003	66	- 14	전 세계
Twitter	2006	150	1,238	전 세계
Orkut	2004	100	20	남미
QQ	2009	523	138	중국
CyWorld	1999	21	4	한국
Mixi	2000	14	4	일본
Vkontakte	2006	91	22	러시아
Skyrock	2007	21	10	유럽

주: 사용자 수는 2010년, 성장률은 2008-09년 기준.

자료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영 노트 vol. 75, 2.

하지만 트위터에 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단순한 양적 성장세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트위터가 기존의 SNS와 질적인 차원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트위터는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과 높은 친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타 SNS와 차별화된다. 알다시피 트위터는 컨버전스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여타 다른 SNS들이 컨버전스적 기술로 규정할 수만은 없는, 컴퓨터에 바탕을 둔 인터넷 환경과 높은 친화성을 갖는데 반해, 트위터는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이 특화된 스마트폰과 높은 친화성을 갖는 것이다. 물론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고도의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등의 SNS 역시 스마트폰과 일정 부분 친화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트위터의 경우 애초부터 모바일 환경 하에서의 정보의 공유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출현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기존의 SNS가 컴퓨터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 SNS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트위터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진화한 모바일 SNS로서의 특징을 지닌 채 출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내가영 2009).

둘째, 기존의 SNS가 사용자들 간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트위터는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개념이 결합된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라는 점에서 다른 SNS와 차별성을 갖는다(최민재 · 양승찬 2009). 물론 여타 SNS들 역시 사용자들 간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블로그(Blogs)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의 SNS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방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되는데 반해, 트위터는 ‘정보 공유’와 ‘정보 생산’에 특화된 인터넷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결국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혹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려는 주체들에게 트위터가 좋은 권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각각의 권력 주체들이 어떠한 정보를 자신의 권력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각 권력의 주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트위터를 통해 추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많은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는 트위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기술적인 수준에서 디지털 융합을 상징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와 지식의 유통 및 그와 관련된 권력 관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트위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 하의 권력의 작동방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2 장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가설

제1 절 권력 정상화 가설과 변화 가설

디지털 컨버전스를 비롯한 정보화 이후 사회 내의 변화를 다룬 정치 영역의 논의 가운데 ‘권력’에 주된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이 정보화 사회 혹은 컨버전스 사회의 특성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면서 그로 인한 권력 관계의 변화를 추상적인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존 연구들의 권력에 대한 시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기술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계적 권력구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들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가를 비롯한 기성 권력의 힘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정보격차(digital divide)와 컨버전스 격차(convergence divide)로 인해 계층 간 권력배분에도 한계가 있을 것임을 주장한다(Huges 1987; 강명구 1995; Rotenstreich · Hart 1996; Jerit *et al* 2006; Carr 2008; 김미경 2008; 김상배 2008; 윤영민 외 2009: 4; 김상배 2010: 235-243).

둘째, 정보기술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의 권력 관계가 수평적 권력구조로 바뀌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개 변화된 환경 하에서의 국가의 거버넌스적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의 협력주체들로서 NGO와 개별 시민들의 부상에 관심을 갖는다. 나아가 이들은 새로운 권력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Carnoy · Castells 2001; 장원석 2004; Beck 2005; 김민호 · 김정준 2007; 강원택 2007; 이재열 · 송호근 2007; Jenkins 2008; Shirky 2008; 조성경 2008; 김태우 2008; 안종묵 2008; 전재성 2008; Qualman 2009; 조희정 2010).

이상과 같은 주장은, 비록 이들이 ‘권력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지만, 정보화

시대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에서의 권력의 변화 양상과 그 흐름을 짚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각각의 주장들 모두 나름의 사례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각각의 상반된 주장들은 오히려 오늘날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호보완성을 갖는다. 다른 말로 이들 주장 중 어떤 하나의 입장만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자의 시각을 더욱 적절하게 조절하여 반영할 경우, 오늘날의 사회상과 권력의 변화상을 더욱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은 채, ‘권력 정상화 가설’과 ‘권력 변화 가설’ 사이에서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들의 연구가 정치권력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란 점에서 분석의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연구는 권력의 자원과 권력의 수단, 나아가 권력의 결과의 측면에서 오늘날 권력이 각각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탓에, 단순히 사회의 변화상을 통해 권력의 변화상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분명 이들의 연구로 하여금 일종의 선형적 성격을 갖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과는 차별되는 차원에서 권력 개념들에 따라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의 변화상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 사회가 여전히 변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어떠한 ‘결과’를 미리 얘기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더욱 필요 할것으로 보인다.

제2 절 연구 가설: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의 권력 개념

전술한 바 있듯이, 본 연구는 기존의 권력 개념을 활용하여,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의 변화양상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새로운 권력 개념 또한 제안해 볼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 개념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해 보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설 수준에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에

서의 권력 개념에 대해 먼저 정의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에 대한 정치학의 정의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달의 권력 정의이다. 달(1957)에 따르면 권력은 “B로 하여금 A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끔 만드는 만큼의 A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즉 자원(source)에 대한 점유와 수단을 통해 A가 B의 일정한 부문에 행사하는 양적인 힘이 바로 권력인 것이다(Dahl 1957, 202-203).

권력에 대한 이와 같은 달의 정의는 권력의 주체적 속성, 다른 말로 행위자 중심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권력을 둘러싼 여타 사회적 관계의 측면과 구조적 측면이 달의 정의 속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의 정의는 단순한 행태적 의미를 넘어, 권력의 형식적인 면을 잘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그것이 무엇에 의해 촉발되었는지 간에—달이 말한 틀에 따라 사실상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의 이러한 권력에 대한 정의는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형식적 준거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서도 위와 같은 권력의 형식은 유지된다고 한들, 그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권력은 위와 같은 형식적 틀에 따라 여전히 행사될 수 있지만, 권력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그 맥락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컨버전스 시대 하에서의 권력의 내용은 과연 달라지고 있을까?

알다시피 탈근대를 전후로 시민들의 지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은 점차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아가 정보화를 통한 기술적 뒷받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시민들은 최소한 일상적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국가나 혹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없이도 원활히 작동되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사소한 문제나 고민이 생겼을 때 그들은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다. 한 마디로 말해 일상적인 영역에서 국가권력과 같은 기성 권력의 존재감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자신의 권력자원으로 사용가능하게 한 것은,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 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새로운 권력수단 때문이다. ICT 분야, 단위기술들의 융합으로 인해 등장한 스마트폰 등이 그것인데, 컨버전스 사회의 고도화된 네트워크와 기기의 발달은 권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대중화시켰으며, 각각의 사람들 자체를 정보가 전달되는 일종의 ‘정보 루트’로 변모시켰다(Comm · Burge 2009, 11).

이러한 권력 수단들은 고도화된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적은 비용과 적은 투자로 보다 많은 권력의 결과를 창출하는 ‘권력의 경제(economy of power)’⁴⁾를 창출하였다. 나아가 기성 권력에 비해 많은 자원을 갖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권력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트위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권력행사자인 A는 스마트폰이라는 저비용 · 고효율의 권력 수단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생산한 ‘정보’라는 자원을 통해 자신의 트위터에 팔로잉(following) 된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 이후,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이후 달성된 ‘권력의 경제적 속성’은 기성 권력 외에 미시적인 권력 주체들로 하여금 기성의 권력 관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권력 관계 하에서의 능동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과거에는 권력의 주체일 수 없었던 미시적 권력 주체들의 등장은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기존의 권력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기존의 권력 개념은 암묵적으로 단 하나의 권력 주체, 즉 A만을 권력의 주체로 상정하는데 반해,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은 A만을 주체로 호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컨버전스가 권력 관계에 초래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권력의 주체를

4) ‘권력의 경제’라는 개념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권력의 속성을 의미한다(Foucault 1991, 135-136).

선행적으로 미리 규정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말해 탈근대 이전, 보다 좁게는 컨버전스 시대 이전의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을 행사하는 A(갑)는 암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소한 B(을)에 비해서는 월등한 자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전근대 시대의 군주와 영주, 근대 이후의 국가와 관료, 기업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권력수용자인 B에 비해 월등한 권력 자원과 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A로서 B에 대해 군림할 수 있었다. 즉 A는 이미 그 자체 특정한 A였으며, B는 결코 A가 될 수 없었다. A와 B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고 있었으며, 양자는 결코 서로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의 경제적 속성은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결과에 앞서 그가 보유한 자원과 수단에 따라 권력 주체인 A(갑)로 규정받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화된 권력 수단과 이를 통한 권력 자원화로 인해 권력의 주체인 A(갑)는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A(갑)로 규정받는 ‘사후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권력의 작동에 앞서 이미 A(갑)였던 A(갑)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 A(갑)가 되기도 하고, B(을)가 되기도 하는, 혹은 B(을)의 A(갑)로의 전환이 쉽게 일어나는, 위계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이면서 상호적인 대당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상을 감안하여 우리는 달의 권력 개념을 약간 비틀어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B(A)로 하여금 A(B)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끔 만드는 만큼의 A(B)의 능력, 혹은 자원(source)에 대한 점유와 수단을 통해 A(B)가 B(A)의 일정한 부문에 행사하는 양적인 힘”

어떻게 보면, 기존의 권력 개념에서 도출된 권력 개념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A가 B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적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선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지난날의 부단한 관계를 단절시킨 일종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푸코의 사목권력(pastoral power)⁵⁾이란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푸코는 사목권력이란 개념을 통해 권력의 탈주체성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에 따르면 본래 ‘다스림(governing)’이란 개념은 근대를 전후한 시기 특수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기 이전에 주로 거주, 생계, 먹거리, 보살핌, 위생의 제공과 같은, 나아가 명령, 호의적인 예방 행위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Foucault 2007, 122). 따라서 그러한 권력의 구체화된 형태라고 할 사목권력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주체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같은 특정한 주체만을 권력의 주체로 호명하지 않았다(Foucault 2007, 122, 129). 즉 권력은 포괄적, 탈주체적 개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근대를 전후한 시기 사목권력이 국가에 점점 포섭되기 시작하면서 ‘보살핌’과 ‘인도’라는 사목권력의 본질적 의미가 서서히 퇴색되기 시작한다. 권력은 보살핌의 성격을 잃어가고 점차 통제적 성격을 강화시킨다. 나아가 근대 이후 국가로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고 사목권력의 집행자로서 국가 관료가 증대되면서, 또한 ‘치안’이 국가의 주요 기능으로 추가되면서부터, 권력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제공할 수 있는, 국가와 같은 특정한 주체만을 주체로 호명하게 되었다(Foucault 2000). 결국 푸코는 사목권력이란 개념을 통해 근대 이후 비틀어진 권력의 개념을 그것이 특수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기 이전의 자리로 돌려놓으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목권력’이란 말 그대로 양치기와 양떼와의 관계에 유추할 수 있는데, 양치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양을 보살핀다. 하나는 항시적인 보살핌으로, 양떼의 먹거리와 관련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양떼를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거나 우리로 다시 데려오는 일이다(Foucault 2007, 128). 푸코는 사목권력이란 개념을 통해 근대 이후 권력이 획득한 억압성, 강제성이란 관점이 아닌, 보살핌과 인도의 차원에서 권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어쨌든 이상과 같은 푸코의 논의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본래 권력이란 개념이 국가와 같은 특정한 주체만을 권력의 주체로 호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B가 아닌, A가 권력의 주체로 호명받게 된 것은 A가 본원적으로 권력의 주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갖는, 역사적인 일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에서의 권력 주체의 변환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푸코가 사목권력이란 개념을 통해 하나의 이상적인 권력의 형태로 제안한 권력의 모델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에서 비로소 가능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로소 권력은 국가와 같은 기성권력으로부터 탈구(脫臼)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비록 논리적인 수준에서 컨버전스 사회 하의 환경이 B(을)의 A(갑)로의 전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B(을)의 A(갑)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B(을)의 A(갑)로의 전환은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A(갑)로 전환한 B(을)가 A(갑)의 행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 자체로만 본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을 푸코의 사목권력의 모델에 근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가설을 ‘권력 변화 가설’의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사실은 ‘결과’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가설이 의미하는 것은 A의 B로의 전환(마찬가지로 B의 A로의 전환)일 뿐, A와 B가 얼마나 전환되고 있는지, 혹은 A와 B가 그러한 전환을 통해 얼마나 큰 권력의 결과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말해주진 않는다. 예컨대 B가 A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들, 여전히 A가 B에 비해 A로 활동하는 빈도수가 월등하다거나, 혹은 A가 거두고 있는 권력의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한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에서도 기존의 권력 구조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결국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에 대한 본 연구의 정의는

‘권력 정상화 가설’과 ‘권력 변화 가설’의 균형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사회가 변화하듯 권력 개념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사회관계 자체가 변화한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 하에서의 권력 개념 역시 그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이후의 어떤 일반화된 권력 개념을 도출하는 데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화된 ‘권력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의 ‘권력 관계’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며,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시일 내의 ‘권력 관계’를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추론해 보는 일이다.

제 3 장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형성 과정

앞서 소개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 개념 가설’을 검증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 구조와 정치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달의 권력 개념들에 따라 권력을 그것의 원인과 결과의 수준에서 각각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달은 권력의 실재성 여부를 규명하고, 두 권력 간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권력 자원에서의 차이. 둘째, 권력 자원을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 셋째, 권력에 반응하는 질적인 범주의 차이. 넷째, 권력에 반응하는 양적인 수의 차이. 다섯째, 권력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확률의 차이(Dahl 1957, 205-206)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다섯째 기준에 대해 달은 이를 ‘권력의 실질적인 크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이 이처럼 여타 다른 기준과 다섯 번째의 기준을 분리하고 있는 것은 달리 말해 어떠한 권력이 제아무리 좋은 자원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실제 어떤 대상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다섯 번째 기준이야말로 권력을 권력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스트레인지의 주장처럼 ‘지식’과 ‘정보’를 자원으로 한 권력의 경우 그것이 행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계량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어떠한 ‘지식’과 ‘정보’가 행위자들의 판단과 행위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혹은 그러한 ‘정보’와 ‘지식’이 없었다면 행위자들이 어떠한 행위와 판단을 하지 않았을지는 사실상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 역시 우선은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기준에 따라 권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록 다섯 번째 기준에 따라 권력을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

석 자체의 선행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지만, 권력 개념의 틀에 따라 체계적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을 분석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최소한의 의미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제 1 절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원인: 자원과 수단

전술한 바 있듯이, 권력은 주체를 호명한다. 권력은 주체를 동반하기에, 주체에 따른 작동방식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근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은 대부분 A만을 주체로 호명했었다. 따라서 우리는 A를 통해 행사되는 권력의 작동방식에만 초점을 맞추더라도,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권력은 A만을 주체로 호명하지 않는다. 푸코(2007)가 얘기하는 고대 헤브라이즘적 사목권력이 특정한 주체만을 권력의 주체로 호명하지 않듯,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은 이제 기성 권력만을 주체로 호명하지 않는 것이다. 권력은 비로소 새로운 주체를 가지게 되었으며, 기성 권력으로부터 탈구(脫臼)된 권력은 이제 새로운 주체와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체별로 상이한 권력의 작동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본 연구는 권력의 주체를 크게는 ‘제도 권력’과 ‘비제도 권력’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 권력’이란 곧 기성 권력(즉 A)을 의미하는데, 기성 권력을 ‘제도 권력’의 개념으로 포섭한 이유는 근대 이후 A의 권력이 행사되는 주된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제도는 A의 권력이 B에게 전달되는 주된 통로이자 매개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성 권력(즉 A)을 ‘제도 권력’으로 분류하고,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들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시 권력 주체들(즉 B)을 ‘비제도 권력’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권력 주체에 따라 어떠한 권력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력의 자원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 행사하고 있

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1. 제도 권력

가.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자원

베버(Max Weber)가 익히 지적한 바 있듯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폭력과 관직세습에 기반을 둔 ‘전통적 지배’는 ‘합리적 지배’로 점차 대체되어 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는 근대 국가의 주요 권력운영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폴란차스(Nicos Poulantzas 1980)와 기든스(Anthony Giddens 1991)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베버의 관점에 따라 전근대 국가와 근대 국가를 구분하면서, 근대 국가가 제도화된 관료들과 기구들을 통해 통제기구로서의 사회제도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식이란 합리적 기제를 통해 지배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탈근대 이후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이러한 양상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세계화 이후 권력 자원의 다원화와 권력 주체의 다양화로 인해 오늘날 지식권력은 더 이상 국가의 능력만을 유일한 원천으로 생성되지 않게 된 것이다. 국가는 자신의 지식권력을 다른 주체들과 공유하며, 근대국가로서 누렸던 고유한 자기의 권력기반을 점차 상실해 간다(Strange 1988; Carnoy · Castells 2001; 김상배 2006).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권력 자원으로서의 ‘지식’과 ‘정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근대와 탈근대의 모든 권력 주체들이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권력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별 차별성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두 시기 간 차별성은 엄밀히 말해 권력 자원으로서의 ‘지식’과 ‘정보’가 아닌, 오히려 그러한 자원을 점유하고, 나아가 그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질적 범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이후 권력 주체의 질적 범주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술의 진전은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과거에는 정책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일부 제한적인 미디어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화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이제 각 개인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통해 정책과 이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이 자신을 표현할 공간을 가졌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공간이 제한된다보면, 국가나 혹은 사회적으로 권위가 부여된 일부 사람들만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보와 지식의 독점, 나아가 이들을 바탕으로 한 권력의 독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류준열 2004, 46-47).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전으로 인해 이제 개별 시민들은 자기만의 발언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개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단순한 정보의 수용자가 아닌 정보생산자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개별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을 특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곧 기존의 정부 중심의 통치체제의 약화 및 정당과 같은 대의제 기능의 약화 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과거와는 확연한 단절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를 이를 통해 권력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고 조심스레 추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을 마디로 말해, 권력 자원으로서의 ‘정보’와 ‘지식’, 비제도적 권력 혹은 권력의 타자일 수밖에 없었던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수용됨으로써 ‘권력 관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권력 주체의 질적 범주의 확대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앞서 언급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에서의 권력 개념에 대한 가설’ 역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체의 변환이 기존의 권력 구조를 과연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또 얘기는 달라진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 이후,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나아가 각각의 개인들이 그러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오늘날 권력 주체로서의 미시 권력의 등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항상 진리는 구체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는 논의의 초점을

‘정보 그 자체’보다는, ‘어떤 정보’가 ‘어떤 주체들’에게서 권력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맞춰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와 같이 권력 자원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추상 수준을 낮출 경우, 우리는 과거와 같은 주체별 정보 점유의 패턴이 일정 부분 오늘날에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언뜻 보자면 오늘날 각각의 권력주체들은 정보의 ‘동시성’과 그 ‘공간성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이한 정보를 각각의 권력자원으로 점유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는 여전히 정치적·군사적 정보를 주로 점유하며 이를 권력자원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기업은 경제적·산업적 정보를 자신의 권력자원으로 활용한다. 이에 반해 시민은 주로 일상적 정보를 권력자원으로 점유한다. 이러한 정보의 점유 패턴은 분명 근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국가나 관련 기관들이 자국이나 해외에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특히 정치적 정보의 경우 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치적 정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정보들이 대개 국가와 같은 권력 기관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생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들을 그들이 독점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정보를 만드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들에 대해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2003년 미국이 화학무기 보유 등을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그러한 정보 자체는 미국 정부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당시 그것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정보는 많지 않았다.

비단 정치적 정보만이 개별 시민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제 하에서 경제상황을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참고 자료가 되는 고급 경제 정보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역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세계적인 정보 서비스 업체들인 Thomson Reuters, Reed Elsevier, Wolters Kluwer 등은 정보콘텐츠를 일차적으로 일반정보 서비스와 전문정보 서비스로 분류하는데, 무료로 공급되는 전자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이용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그 활용도가 높은 유

료 전문정보 서비스⁶⁾의 경우엔 거대 기업들과 일부 전문가들만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73-80). 정치·군사적 정보의 경우 그것에 대한 접근 자체가 법·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반(半)강제적인 수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경제·산업 정보의 경우엔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을 구입하는 데 드는 고비용의 문제로 인해 준자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은 제한될 뿐이다. 예컨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각종 중요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블룸버그의 단말기 1년 사용료는 대략 3,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시민들 중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보화 기술의 진전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자체가 곧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까닭에, 가능태적인 수준에서의 정보접근성의 증대와 현실태적인 의미에서 정보접근성의 증대를 선불리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통되는 정보 양의 증대를 통해 일반 개별 시민들의 지식권력이나 정보권력의 증대를 단언할 순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사용자는 믿을 수 있는 ‘정보원(源)’을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SERI 2010b, 5), 결국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대개 기성 권력 주체들로부터 생산되고, 또 제공되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적 이유에서든, 혹은 경제적 이유에서든지 간에 일반 시민들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보네트워크 속으로 술하게 넘나드는 모든 정보가 아닌,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크고,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정보들로부터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

6) 전문정보 서비스는 다시 세분화되는데, 크게 STM(Science, Technology, Medicine: 과학, 기술, 의료/건강), LTR(Legal, Tax, Regulation: 법률, 세무, 규제), Business Information(비즈니스 정보: 증권거래 정보, 금융뉴스 및 리서치, 신용정보, 마케팅,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73).

히 멀찍이 떨어져 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시민들은 이들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가진 국가나 일부 소수에 의해 재해석되고, 나아가 이들의 필요에 따라 재유통되는 정보들을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정보’인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주요 정보들은 여전히 기성 거대 권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독점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기존의 권력체라고 할 국가나 전문지식인들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그들이 그러한 자원을 통해 행사하는 힘이나 그 효과가 지식의 대중화와 빠른 정보 공유 등으로 인해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기존의 ‘권력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아직까지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 각각의 주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권력 자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존의 ‘권력 구조’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수단

그렇다면 ‘권력 수단’의 수준에서는 각 주체별로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사실 근대 이후 ‘지식’과 ‘정보’가 주요 권력 자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통로인 권력 수단 역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기성 권력 주체들은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전달하고,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특징은 사실상 컨버전스 시대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결국 ‘제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우리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와 그 이전 시대 간의 차별성을 포착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져온 권력 수단들이 기성 권력 주체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한다.

우선 알아야 되는 사실은 흔히 트위터 등의 모바일 SNS가 대개 개인과 같은 비제도권 내의 주체들을 권력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도구로만 간주되곤 하지만, 그러한 정보화 기기는 어디까지나 가치중립적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기

기들은 비단 비제도권 내의 주체들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기성 권력들의 경우 조직의 크기가 방대한 만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속도는 분명 더디다. 그러나 일단 변화가 시작된 후에는 기존에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권력 수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Wolf 2001, 184). 예컨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나아가 한국의 유명 정치인들과 기업의 CEO들은 뒤늦게 이들을 자신들의 목적에 활용하고 있지만 (SERI 2010a), 그들이 이를 통해 거두고 있는 효과란 사실상 비제도 권력 주체들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라고 환영하였다. 초기의 인터넷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었으며 운영 주체나 사용자들도 주로 연구자 등의 비상업적인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적이고 권위적인 사업자들에 대항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인터넷의 상업화 또한 진행되었다.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정부는 탈규제를 통한 산업 발전에 적극 나서게 되었고, 완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미디어의 시장은 더욱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속성을 띄게 되었다(류춘렬 2004, 38-42). 트위터와 같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트위터를 통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트위터는 어느새 디지털 시대의 가장 적절한 사업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Comm · Burge 2009, 15-24).

물론 예컨대 트위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SNS를 통해 폐쇄적이었고, 단선적이었던 기존의 네트워크 구조가 상호소통의 개방적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인 사실이다. 일반 대중들이 유명 정치인들이나 유명 CEO들과 1:1로 실시간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분명 상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트위터가 정치인들과 CEO들, 그리고 유명인사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었다고 해서, 그와 같은 권력 수단이 기존 권력의 구조마저 바꾸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아직까지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인들과 CEO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를 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어떠한 권력이나 물질적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 그들이 가진 어떠한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트위터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정보화와 디지털 컨버전스가 제공한 권력 수단들이 기성 권력을 일종의 감시권력(surveillance power)으로 변환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상배 2008; 2010). 사실 기술의 진전으로 인해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체되어간다고 해서 기성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기성 권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기성 권력을 확대·강화하는 토양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상배(2008)는 기성권력이 실력을 발휘하는 영역으로 구글(Google)과 같은 전문검색엔진이 자리를 잡고 있는 전문기술 분야를 언급한다. 일반 시민들 역시 궁극적으로 인터넷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엘리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상배 2008, 35).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기술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의존이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의 감시권력의 작동이다. 김상배(2008)는 구글어스(Google Earth)에 잡힌 영상이나 지도, 전화번호 등을 거대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감시권력의 예로 들기도 한다(김상배 2008, 33-35). 즉 개개인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개별화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권력의 속성이 정보화 시대 이후 더욱 세련되고 정밀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로 인해 개개인의 자율성의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기성 권력은 개인과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데이터를 보유하는 있지만, 대부분의 감시당하는 타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김상배 2010, 242).

이런 면에서 겔러웨이(Alexander R. Galloway 2004)가 주장하는, 탈근대적 의미의 파놉티콘(panopticon)이라고 할 프로토콜(protocol)의 개념 역시 이해할 수 있다. 프로토

콜은 전통적인 의미의 위계질서를 해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육안을 대신하여 정보화 네트워크에 기반한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 심지어 감시 대상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준에서 일일이 개인들을 감시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위협적이다(김상배 2010, 236-243). 흔히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이후 정보화 네트워크 기술의 심화로 인해 기성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졌다고 말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그림 3-1] 트위터의 감시도구화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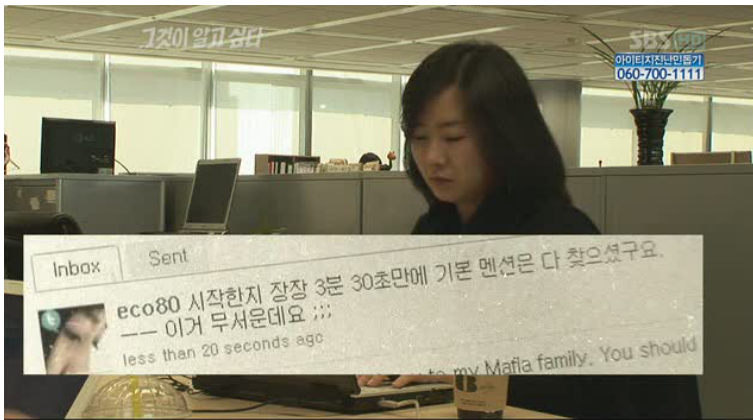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0년 1월 3일 방송.

[그림 3-1]의 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0년 1월 국내의 한 방송사는 트위터를 소재로 흥미 있는 내용을 다룬 바 있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

램에 출연한 미국의 한 목사는 그가 청소년 갱단들을 트위터를 통해 감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트위터가 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도구와 정보공유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감시의 도구’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같은 방송에서는 전문가 두 명을 동원하여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실험을 하였는데, 전문가들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내었다. 이는 국가 혹은 누군가가 트위터를 활용하여 어떤 사람을 감시 및 통제하려고 할 경우, 굳이 그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림 3-2〕 트위터의 감시도구화 사례 2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0년 1월 3일 방송.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는 권력으로 하여금 ‘권력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의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경제적 속성’이 기성 권력에 비해 많은 권력 자원과 수단을 갖지 못한 미시적 권력 주체들로 하여금 권력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한 토대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수단은 기성 권력에게도 마찬가지로 ‘권력의 경제’를 달성 가능하게 한다.

즉 이상의 사례들은 그것이 비록 국가와 기업과 같은 기성 권력에 의한 감시 사례

는 아닐지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네트워크들이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한낱 트위터라는 단순한 권력 수단을 통해서도 소수에 의한 다수에 대한 감시권력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위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권력 자원과 다양한 권력 수단을 점유하고 있는 기성 권력들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들의 경우 자신의 권력을 감시권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다른 그 어떤 주체들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 문제는 사실 ‘능력’이 아닌 ‘의지’일 수 있다. 기성 권력들은 설령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이 제공하는 이와 같은 권력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컨버전스적 권력 수단들은 기성 권력으로 하여금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의 행사를 더욱 효율적이게끔 만든다. 다시 말해 컨버전스적 권력 수단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권력 관계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성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 반대로 기성 권력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자원 및 수단에 컨버전스적 권력 수단을 결합시킴으로써 자신들을 감시하려는 미시적 권력 주체들의 감시권력들을 역으로 감시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린다. 한 마디로 기성권력은 권력의 새로운 창출이 아닌, 권력 강화의 효과를 누린다.

스마트폰이나 넷북(Netbook), 태블릿 PC(Tablet PC) 등을 비롯한 여러 기기들이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혹은 그것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처럼 기성 권력들이 그것을 자신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이후 국가의 권력운영방식(modus operandi)이 합리화되고, 그에 따라 어느 다른 권력 자원보다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와 같은 거대 기성 권력들의 경우 ‘지식’과 ‘정보’만이 아닌, 다른 형태의 권력 자원과 권력 수단들 또한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비정보적인 권력 자원’과 ‘정보적인 권력 자원’이 결합할 경우 그에 따른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점 또한 쉽게 추측 가능하다.

소결하자면, 제도 권력들은 여전히 권력 자원에 있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우위를 통해 새로운 권력 수단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마저 보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 관계와 그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려를 통해서만이 컨버전스 시대 각 권력 주체들 간의 권력 관계가 어떤 균형 하에 놓여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비제도 권력

가.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자원

고대로부터, 주로 지배의 대상이기만 했던 일반 대중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권력 자원이나 수단의 점유와는 꽤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는 ‘정보’나 ‘지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종교 기관들의 교리 독점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경우 지배 계급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이에 대한 철의 장막을 통해 자의적으로 지식을 생산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행위를 지시했다 (Goody 1988, 19).

유럽을 기준으로 할 때, 14C 계몽주의 이후 지식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의 유통과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일반 시민들은 그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모여야만 하는 수고를 했다. 예컨대 앙시앵 레짐 시절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은 Palais-Royal의 정원에 있는 ‘Cracow tree’ 아래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는 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는 기성 권력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당시 국가는 비밀경찰 등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파견하여 이들을 감시하곤 했다(Darnton 2000). 나아가 정보의 유통 자체가 시·공간적 한계를 쉽게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가

진 영향력 정보의 유통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기성 권력에 대항한 권력 자원으로서 정보나 지식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비록 근대 이후 체계적인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시민들의 지식 자율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대 이후에도 기성 권력과 일반 시민들 간의 권력의 불균형은 한동안 지속된다. 국가로 권력이 집중되고, 나아가 국가기관이 비대해지면서, 국가는 체계적인 관료기구들을 동원하여 정보의 생산과 독점을 한층 강화시켜 나갔다. 비단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학적인 정보와 지식은 대중화되기보다는 특정 소수 전문 지식인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술한 바 있듯이, 이러한 틀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정보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 탈근대 이후 시기부터였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정보 생산과 공유가 가능하게 된 것 역시 탈근대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이 시기 이후부터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생산과 유통 수단의 대중화를 바탕으로 국가나 전문 지식인과 같은 기성 지식 권력의 그늘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컨버전스 기기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특히 이들 기기들이 탈근대 이후 파편화되었던 개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동원 가능하고 결집 가능한 네트워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권력에 반응하는 양적 밀도와 질적 범주를 증대시킴으로써 권력 자원으로서 그들의 ‘정보’가 가지는 가치를 또한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네트워크는 미시적 권력 주체들의 권력을 권력일 수 있게끔 하는, 적은 힘과 비용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물망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제 ‘정보’와 ‘지식’은 특정한 권력 주체로부터 탈구되었다. ‘정보’와 ‘지식’은 다양한 주체를 통해 유통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늘날 우리는 개별 시민들이 ‘지식권력’과 ‘정보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낯설지 않게 받아들인다.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blogger)들은 근대의 전문 지식인과 다름없는 지위를 구축하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앞서 ‘제도 권력’의 경우를 통해 보았듯이, ‘정보일반’이나 ‘지식일반’이 아닌, ‘어떠한 정보’, ‘어떠한 지식’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경우, 우리는 이들 미시 권력 주체들, 다른 말로 비제도 권력들의 권력 행사를 단순히 낙관론적인 시각에서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보았듯이 제도 권력과 비제도 권력 간에는 서로 점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질이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로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생활정보들만을 자신의 권력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 정보로부터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에 주목할 수 있다. 국내의 한 연구진은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어놓은 바 있다. 그들은 트위터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들과 구글(Google)의 서치 키워드(Search keyword)를 비교하여 트위터에서 다뤄지는 ‘정보’의 성격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글 서치는 오늘날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시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공유되는 주제 중 단지 3.6% 정도만이 구글에서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구글과 공유한 3.6%의 정보 대부분은 세계의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나 유명인사, 영화와 관련된 흥미 위주의 정보들이었다(Kwak *et al* 2010, 6).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쉽게 말해 트위터에서 개인들이 활용하거나 서로 간에 공유하는 정보들은 주로 일상적인, 혹은 사적인 대화가 주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날 트위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공적이기보다는 사적인 성격을 지니며,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트위터와 구글 사이의 주제 간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트위터가 다른

말로는 열린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그 사용자의 질적 범주나 양적 밀도에 있어 나름의 폐쇄성을 갖는 사적인 공간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분명 비제도 권력주체들에 있어 권력 자원으로서 ‘정보’가 갖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다.

〈표 3-1〉 블로그와 전통 언론 매체 간 이슈 비교

Topics of News Coverage: Blog vs. the Traditional Press		
구 분	Blogs (% of stories)	Traditional Press (% of newshole)
Politics/Government	17%	15%
Foreign Events(non-U.S.)	12	9
Science	10	1
Technology	8	1
Health and Medicine	7	11
Celebrity	7	2
Economy	7	10
Terrorism	6	4
Crime	6	6
Environment(including Global Warming)	4	2
Pop Culture	3	1
Oddball	3	< 1
Gay issues	2	< 1
Consumer News	2	< 1
Education	2	1
Media	2	2
Religion	1	< 1
Immigration	< 1	< 1
Race/Gender Relations	< 1	1
Disasters/Accidents	< 1	2

출처: http://www.journalism.org/analysis_report/blogosphere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에도 주목할 수 있다. 정보화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트위터의 경우 2009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 정보화 시대의 개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매체라고 할 트위터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각 매체별로 이슈화되는 뉴스와 주제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화 시대의 뉴미디어 매체라고 볼 수 있는 블로그와 TV와 신문과 같은 전통 언론 매체의 경우를 앞의 <표 3-1>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화 시대의 뉴미디어 매체라고 볼 수 있는 블로그의 경우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매체 모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이슈는 정치/정부 관련 분야이며, 그 외에 항목에 있어서도 두 매체는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해, 블로그가 전통적 언론 매체와 일정 부분 연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하며, 나아가 전통적 언론 매체를 통해 전달된 정보를 개인의 수준에서 ‘해석’하고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유포하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도 있겠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 확연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뉴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트위터다. 다음 <표 3-2>를 보도록 하자.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트위터에서 가장 크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는 웹이슈나 정보기술 및 기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이것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는 해외의 사건·사고들로 지난 2009년 6월 이란 대선 사건 등이 트위터 상에서 이슈화된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표 3－2〉 트위터 주제별 이슈

Topics of News Coverage on Twitter	
구 분	Twitter(% of Stories)
Technology	43%
Foreign Events(non-U.S.)	13
Politics/Government	6
Crime	5
Celebrity	5
Science	5
Health and Medicine	4
Environment(including Global Warming)	4
Pop Culture	3
Oddball	3
Race/Gender Relations	2
Disasters/Accidents	2
Terrorism	1
Consumer News	1
Economy	1
Media	1
Sports	1
Weather	1
Other	1

출처: http://www.journalism.org/analysis_report/twitter

그런데 권력 자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블로그와 전통 언론 매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트위터에선 미미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각 개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제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트위터 이용자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제도 권력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는 정보가 정치·경제 정보라는 사실과 확연히 구분되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잘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보 자체의 질적 가치로만 본다면 정치·경제 정보야말로

로 실상 일반 시민들의 삶을 가장 깊숙이 지배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2010년 6월 한국 지방 선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트위터는 때론 정치적인 이슈에 열광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회성적인 사례를 통해 트위터의 사회적 기능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선부르며, 오히려 일상적인 수준에서 트위터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정치·사회적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최소한 위의 연구 결과들만을 통해 평가하자면, 트위터는 기존 사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일종의 별도의 가상공간인 듯 여겨진다. 기성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트위터가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트위터는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이러한 트위터의 속성은 트위터를 통해 행사되는 비제도 권력 주체들의 ‘지식 권력’의 가치를 분명 높게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마찬가지로 트위터가 기존의 권력 구조에 중대한 수준에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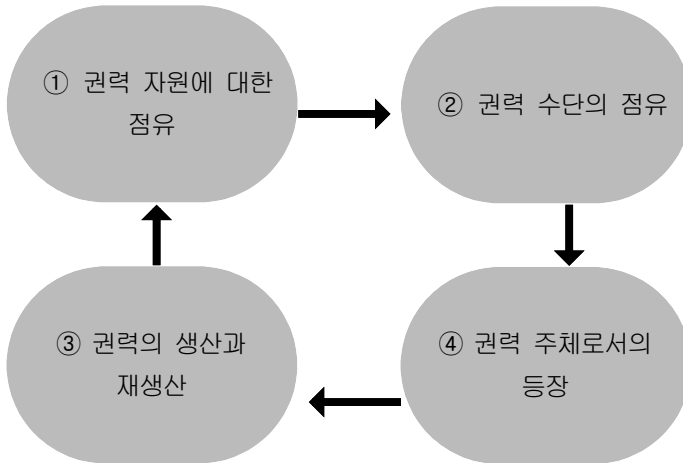
그렇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가져온 변화는 미시적 권력 주체들의 권력 자원에 있어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도 가져 오지 못하는가? 분명한 것은 트위터에서 주로 유통되는 정보가 일상적이고 가십적인 주제들이라는 점에서 트위터의 영향력을 결코 과대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더욱 구체적으로 트위터라는 권력 수단이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이 권력 자원의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보 공유’이다.

나.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수단

고대로부터 기성 권력 주체들이 권력의 주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대개의 경우 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 자원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기술이든 혹은 물질적 형태의 재산이든지 간에 기성 권력들은 권력 자원에 대한 점유를 바탕으로 권력의 수단을 점차 갖춰 나갔고, 나아가 권력 대상에게 권력

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지배를 공고화할 수 있었다. 단순히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패턴을 (그림 3-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3-3) 제도 권력의 권력 생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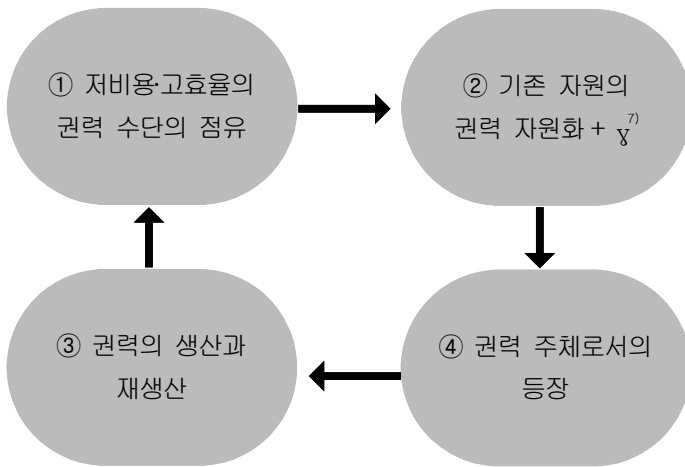


이에 반해 비제도 권력이라고 할 미시적 권력 주체들은 애초에 그러한 자원을 점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들이 어떠한 자원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다수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끼치기에 그들의 자원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앞에서 보았듯이 권력 자원에 있어 제도 권력과 비제도 권력 간 불균형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오늘날 미시적 권력 주체들 각자가 저마다 점유하고 있는 권력 자원 역시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엔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권력의 경제’라는 속성을 제공하는 컨버전스적 권력 수단의 등장은—예전 같았으면 외면할 수 있었던—미시적 권력 주체들 저마다의 권력 자원들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고도화된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과 스마트폰이 결합하여 탄생시킨 트위터와 같은 SNS들은 파편화되었던 미시적 권력 주체들의 권력 자원을 하나의 지점으로 결집시킴으로써 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기성 권력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의 크기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시대 하의 미시적 권력 주체들이 권력 주체로서 유의미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컨버전스 기술이 제공한, ‘권력의 경제’를 갖춘 권력 수단을 그들이 점유하게 되면서 부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단순화의 위험이 따르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4) 비제도 권력의 권력 생산 과정



그렇다면 미시적 권력 주체들을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게끔 만든 권력 수단은 과연 무엇인가? 추상적으로 접근하자면, 우리는 간단히 이를 ‘고도의 접근성을 갖춘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상 수준을 낮춘다면 인터넷 네트워크를 손 안에 넣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든, 스마트폰과 같은 컨버전스 기기들을 권력 수단의 적절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추상 수준을 낮춘다면 이러한 스마트폰과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이 결합하여 탄생한, 사용자들 서로 간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트위터와 같은 SNS를 단연 꼽을 수 있을 것이다.

7) 여기서 γ 가 의미하는 바는 곧 다음에서 다시 설명한다.

권력의 관점에서 SNS와 같은 대중적인 권력 수단이 초래한 가장 큰 변화는 이들이 고도화된 네트워크와의 결합을 통해 적은 비용과 적은 투자를 통해서도 많은 권력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권력의 경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권력의 효율적 작동은 기성 권력에 비해 많은 자원과 수단을 보유하지 못했던 미시적 권력 주체들로 하여금 권력의 주체로 활동하게 만들며, 기성 권력으로 하여금 미시적 수준의 권력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들어 권력 관계는 ‘A(갑)와 B(을)의 관계’가 아닌, ‘A(갑)와 A(갑) 간의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자체 내에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권력행사자’와 ‘권력수용자’ 간의 관계가 아닌, ‘권력행사자’와 ‘권력행사자’ 간의 관계로 변환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권력수단의 대중화는 다양한 권력주체들에게 참여의 개방성을 보장하여 과거에 B(을)의 역할마저도 대신 수행했던 매개적 권력집단으로서의 정당이나 이익 단체의 대표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컨버전스 사회 하의 주된 권력 관계의 틀을 국가(A)와 시민사회(A)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다(황주성 외 2009, 79-99; 조희정 2010, 89-92).

그런데 이상과 같은 권력 수단들은 그것이 다양한 기술이 집적된 컨버전스 기기라는 점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때론 정보 생산의 도구가 되기도 하며, 또 때론 정보 공유와 유통의 도구가, 그리고 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컨버전스적 기술의 성장으로 인해 하나의 기기 안에 수많은 다양한 기능이 접목가능하게 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인데, 흔한 예로 스마트폰의 경우, 유저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각각 다운받아, 각 개인별 특성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와 더불어 다양한 권력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컨버전스 기기의 등장은 오늘날 권력 관계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고효율적인 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수많은 미시 권력 주체들은 이제 단순한 권력 주체가 아니라, 저마다 다양한 권력수단을 갖춘, 그리고 그

러한 권력 수단에 따라 자신을 특화시킨 권력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 작동방식 또한 어떤 하나의 틀에 따라 획일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왜냐하면 권력 수단이 다양하게 변환되는 만큼, 그것을 매개로 작동되는 권력의 작동방식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보화 시대와 컨버전스 시대 간의 유의미한 차별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컨대 정보화 시대가 권력의 주체를 다양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컨버전스 시대는 거기에 더해 권력의 작동방식까지 다양화시키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기능을 크게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보생산의 도구. 둘째, 정보공유의 도구. 셋째, 의사소통의 도구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 수단인 스마트폰(트위터)은 이러한 세 가지 도구적 기능 중 주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 그것은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라는 권력 자원을 생산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단순히 ‘전달하는 수단’인가 등.

사실 스마트폰 등이 정보생산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갖추어진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트위터 역시 자신의 네트워크망을 통해 이렇게 생산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대개의 경우 트위터가 소통을 목적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나 혹은 정보생산을 목적으로 한 정보생산의 도구이기보다는 주로 정보전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Kwak *et al* 2010; PEJ 2010).

그리고 트위터가 주로 정보전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의 미시 권력 주체들의 권력 자원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정보 그 자체’ 혹은 ‘특수한 어떤 정보’의 관점이 아닌 ‘정보 공유’ 및 ‘정보 접근성’의 관점에서 그들의 권력 자원을 이해하게끔 만든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비제도적 권력 주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권력 자원은 ‘특정한 어떤 정보’이기보다는, ‘정보나 지식의 종류와 크게 상관없이 그 어떤 정보나 지식 등에 대해서도 빠르게 이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개방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가 정보생산이나 소통의 도구이기보다는 정보 전달의 도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아쉬움을 던져주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기능 자체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 소수의 기성 권력 주체들이 정보와 지식을 독점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만이 정보를 유통·보급할 수 있는 루트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정보가 가진 힘은 그것 자체가 가진 내적인 가치를 넘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오는가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의미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보가 가진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각 개인들이 기성 권력이 제공하는 것과 별개의 정보 전달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기성 권력의 의지나 편집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대중화시키고 이를 통해 기성 권력에 비판적인 견해를 생산할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9 이란 대선 사례는 시민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전달함으로써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과 왜곡의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트위터의 개방성은 정보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또한 비슷한 성향과 관심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정보에 대해 의견이나 소통이 빠른 시간 내에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을 갖는다.

물론 트위터에서 주고받는 내용은 140자 단문 메시지가 지닌 한계로 인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거나 즉흥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구글의 키워드와 트위터에서 다뤄지는 주제의 신선도(freshness)를 비교할 경우, 구글의 경우엔 매일 95% 정도가 새로운 키워드로 대체되는 반면, 트위터는 72% 정도만이 새로운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트위터의 경우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 즉 리트윗(retweet)이나 응답, 언급 등을 통해 동일한 정보가 같은 공간 내에 보다 오래 지속되

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Kwak *et al* 2010, 6). 즉 어떤 정보가 유통되고 생산되느냐를 넘어, ‘유통되고 생산된 정보를 통해 무엇을 새롭게 생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를 통해 이뤄지는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의 기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정보루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능동적인 ‘정보생산자’로 기능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물론 사용되는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더라도,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이 정보생산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컨버전스 기기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성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권력으로서 전환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기성 권력 주체들은 매순간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수많은 유저들을 통해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생산자로서의 역할은 2008년 11월 26일 인도 뭄바이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테러 사건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테러 사건을 맨 처음 전달한 것은 현장에 있던 일반인들이었는데, 이들은 트위터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속보형식으로 그곳의 상황을 전달했다. CNN을 비롯한 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이 뭄바이 테러 사건을 전달한 것은 이로부터 한 시간이 지나서였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사건 사고 소식이나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같은 소식들 역시 때론 CNN과 같은 뉴스 매체들보다 트위터를 통해 더욱 빨리 전파되기도 한다(Kwak *et al* 2010, 6).

그런데 여기에 더해 우리는 새로운 기기와 권력 수단의 등장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새로운 기기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의 진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기술의 진화를 통해 자아의 정체성 및 사람들 간의 관계 맺음의 방식이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술·사회적 수준에서 정보화 시대의 모바일폰이 가져온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mobility)과 개별성(individuality)으로 정리된다. 이동성은 인간 상호 작용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개별성은 소유와 이용이 자율성을 부과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주체성을 가지게 만들었다(윤석민 2004, 412-413).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 검색능력과 정보접근성이 향상되고 무한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이용자들을 수동적인 이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창작과 유통에 적극 참여하는 ‘프로듀저(Producer)’로 거듭나게 하였다. 즉 디지털화로 인해 수동적 자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찾고, 조직을 뛰어넘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나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황주성 외 2009, 38-39).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정보화를 통한 기술적 뒷받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엄밀히 말해 컨버전스 시대만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정보화 시대’의 유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즉 이것은 두 시대의 특징들이 중첩되어 나타난 하나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셈이다. 그렇다면 컨버전스만의 차별적 기술이 자아의 형성과 사회관계의 형태에 끼친 영향은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와는 차별화된, 개인의 자아와 사회관계에 미친 컨버전스 시대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보화 시대’가 가져온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를 다시금 하나의 ‘네트워크 속으로 결집시키는’ ‘네트워크화된 집단화(Networked collectivization)’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 그대로 이것은 스스로 능동적인 정보생산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프로듀저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금 결집된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 결집의 형태는 비단 컨버전스 시대만의 특징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 성장한 노사모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흔한 예로 수많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카페 등의 모임을 통한 집단화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컨버전스 시대가 제공하는 ‘네트워크화된 집단화’와 기존의 ‘정보화 집단화’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용자가 대개 구분되며, 또한 그러한 집단 내에서 맡은 역할이 위계화된 질서에 따라 고정되

어 있는 데 반해, 전자의 경우엔 저마다 다양한 권력 자원과 특수화된 권력 수단을 보유한 개인들이, 저마다 다양한 권력의 주체이자,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정보프로듀서로서 네트워크에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권력의 주체들이, 그들이 가진 다양한 권력 자원을, 다양한 권력 수단을 통해 공유하는 집단화가 컨버전스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 있듯, 무엇보다 컨버전스 기기가 가진 특징, 즉 하나의 기기 속에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수많은 기능들이 접합되어 있는 그러한 속성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컨버전스 기술이 진화로 인해, 이제 각 개인들은 자기 안의 무한한 자아의 형태들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을 변환시키며,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가 원하는 다양한 요구에 자신을 변환시키면서, 어떤 때는 정보의 생산자로, 어떤 때는 정보의 전달자로, 어떤 때는 소통의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낮에는 사진촬영기자로, 저녁에는 기자로, 밤에는 비평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위계정보보다는 수평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ICT 수단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들 네트워크를 디지털 정치조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조희정·강원택 2010).

사실 어떠한 미시적 권력 주체가 단순히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에 머물고 만다면, 그는 더 이상 권력 주체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권력이란 주체를 호명하지만, 동시에 또한 타자를 호명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타자와의 연결 자체가 단절되어 있진 않더라도, 그러한 연결을 단순한 연결 이상의 끈끈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이상, 그는 권력 주체로서의 스스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트위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은 파편화된 개인을 다시금 하나의 지점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소통과 정보 공유의 場을 제공한다. 즉 정보화가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를 가능하게 했다면, 컨버전스는 개인화된 네트워크를 다시금 결집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와 같은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의 ‘네트워크화된 집단화’로의 전화야말로 컨버전스 시대가 자아와 사회관계에 미친 가장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시적 권력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 자원의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보았듯이 미시적 권력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 자원은 여전히 기성 제도 권력에 비해 미미하다.

그렇다면 왜 기성 권력들은 예전과 달리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저마다 상이하게 파편화되어 있던 작은 목소리들이 하나의 지점으로 결집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미시적 권력 주체들의 권력 자원은 더 이상 그들이 가진 어떤 특수한 정보나 지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그것이 어떤 정보 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2009년 이란 대선 사례가 국제사회에 커다란 호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트위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였기 때문이었다.

ICT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물리적·비물리적 거리감이 좁혀 졌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술의 진화는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파편화되어 있던 개별 주체들이 ‘정보’를 권력자원으로 기성의 권력 관계에 저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교제의 범위를 변화시켜 인간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아는 정보의 양과 질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기 마련인데,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 간의 연대 의식을 과거처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제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Sproull · Kiesler 1991, 21-22).

물론 스마트폰의 등장과 인터넷 환경의 발전을 통해 사람들 간의 근본적인 관계가 바뀌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핵심적인 인적네트워크를 面 대 面 만남을 통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Hampton *et al* 2009).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서로 소원했던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핵심적인 인적네트

워크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술의 진화는 사람들 간에 존재했던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어 주며, 나와 비슷한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아준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과거와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고생할 필요가 없다. 단지 몇 번의 접속과 클릭(click)만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빠른 속도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권력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컨버전스 기술로 인해 권력에 대한 반응 범주와 속도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실제 권력 수용자들을 성공적으로 변화시켰는지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말이다.

소결하자면 컨버전스 시대 하의 미시적 권력 주체들의 권력 자원을 우리는 다름 아닌 ‘정보 공유’와, ‘연대’라고 조심스레 결론 내려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앞서 [그림 3-4]에서 비워두었던 γ 는 바로 ‘정보 공유’와 ‘연대’이다. 비록 그것이 어떤 정보인지, 혹은 그러한 정보의 생산과 공유를 통해 얼마나 큰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는 우연에 내맡기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보 생산과 유통에 있어 이러한 개방성을 갖췄다는 점이야말로 디지털 컨버전스가 비제도적 권력 주체들의 권력 자원에 초래한 실질적인 변화이다.

어떤 연구가는 트위터를 ‘그리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말한 바 있다(Comm · Burge 2009, 6). 트위터란 결국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향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물론 트위터가 기본적으로 그리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트위터가 바로 인간 본연의 그리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것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데, 왜냐하면 서로가 인간 본연의 그리움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 내 친밀성을 극대화시킬 경우, 개별화·파편화되었던 각각의 힘은 더욱 더 거대한 집단으

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 본연의 그리움에 기초를 둔 트위터가 가진 무한한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폰과 같은 컨버전스 기기들이 그러한 연대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앞으로의 권력 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2 절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과정

이 절에서는 컨버전스 시대 하의 권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작동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틀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반응 범주에 대한 분석이다.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컨버전스 기술은 저비용·고효율의 권력의 작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곧 권력을 둘러싼 시·공간의 파괴로 인해 권력에 대한 질적 반응 범주와 양적 밀도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권력이 어떠한 질서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전술한 바 있듯이 기존의 권력은 권력의 주체로서 A만을 호명했기 때문에, A가 행사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이 곧 그 자체 권력의 작동 방식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때 A가 행사하는 권력은 주로 ‘위계적인 질서’에 따라 행사되었다. 그러나 컨버전스 시대는 이러한 ‘위계적인 질서’를 ‘수평적인 질서’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또한 제공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기존의 ‘위계적 질서’가 단번에 ‘수평적 질서’로 대체될 수는 없다. 엄밀히 말해 작금의 시기는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착종되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컨버전스 시대에 행사되고 있는 권력들이 어떠한 질서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이런 점에서 권력 과정에 대한 분석은 ‘제도 권력’과 ‘비제도 권력’의 틀로 엄밀히 구분하자는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두 권력 주체들은 컨버전스 환경 하에서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를 놓고 서로 충돌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각각의 질서들이 복합적으로 착종되어 하나의 컨버전스 권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여기서는 권력 주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권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에 대한 반응

고도화된 네트워크 하에서 트위터나 멀티미디어 복합단말기 등의 사용은 정보에 반응하는 질적, 양적 범주를 확연히 증대시켰다. 이것은 정보화와는 또 다른 형태의 컨버전스 시대만의 차별성이다. 과거 휴대폰 등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상대적으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휴대폰을 통해 어떤 정보가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의 유통과 공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경우엔 접속을 하는 데 있어 공간의 제한성을 가졌다.

그에 반해 네트워크 환경 하에 포섭된, 이동성이 높은 스마트폰 등의 등장은 정보 생산과 공유의 시·공간의 벽을 허물었다. 이로 인해 정보에 반응하는 수와 속도는 분명 전에 없이 증가되었다. 단순히 접근하자면 이것은 정보를 통해 행사되는 권력의 크기가 증대될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반응의 정도와 가능성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그것의 질적 범주와 양적 밀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예컨대 트위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질적 범주가 넓다고 한들, 그 양적 밀도가 높지 않다면 반응의 정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반응’ 자체가 곧 ‘권력의 성공적인 작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한 사용자의 증가나 반응의 증대만을 통해 어떤 변화를 선불리 예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컨버전스 시대의 대표적인 권력 수단이자 자원이라고 할 SNS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앞서 보았듯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으로 2010년 7월 현재 전 세계 5억 명의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트위터의 경우엔 1억 5천 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를 기준으로 한다면 트위터 사용자는 2010

년 10월 현재 170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토종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인 미투데이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물론 보다 고려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사용자 숫자라기보다는, 최근의 급등세라고 할 수 있는데, 보았듯이 트위터는 2008-9년 동안 1,238%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6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분명 이들을 이용하여 행사되는 권력의 반응 범주 증대를 고려함에 있어 유의미성을 던져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사용자 수에 대한 단순한 양적접근이 아닌, 그것이 가지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 사용자 수의 급증을 단순히 낙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예컨대 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 8월 기준 전 세계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는 5천200만의 사용자 중, 트위터에 10번 이상 글을 올리거나 유효한 아이디(screen name)를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사용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6%인 600만 명에 불과하였다(Cha *et al* 2010, 3). 나아가 이들 모바일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질적 범주를 살펴볼 경우 모바일 SNS를 통한 권력의 작동은 더욱 많은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대표적인 SNS의 경우 사용자의 60% 이상이 남자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30, 40대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Comm · Burge 2009, 29-30; SERI 2010a, 1; 2010b, 5; 오마이뉴스 2010. 6. 3). 이것은 SNS의 특성상 주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한 사람들끼리 스스로를 선택하다보니 가지게 된 일종의 집단적 폐쇄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집단적 동질성, 혹은 집단적 폐쇄성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가 갖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의 경우 2010년 6·2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데, 물론 트위터 사용자 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트위터 팔로우 숫자가 높은 정치인들 대부분이 낙선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증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아직까지 트위터가 기성 권력 구조의 틀을 깰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진보 성향의 30~40대라는 점 또한, 트위터의 순수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기 힘들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투표 성향은 트위터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본래의 정치적 성향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위터의 양적인 반응 범주와 실질적인 영향력의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Max Planck) 연구소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많은 팔로워(follower)를 가진 사람이 인기 있는 트위터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향력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를 ‘백만 팔로워의 오류(million follower fallacy)’라고 부른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트위터’, ‘가장 많이 재전송되는 트위터’,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트위터’는 거의 중복되지 않은 채 각각 별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트위터 사용자는 언론 매체, 정치인, 유명인사, 전문가 등이었는데, 이들은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Cha *et al* 2010). 이들의 결론은 트위터 내에서 팔로워되는 표면적인 수치만으로는 사용자의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이것은 트위터 내에서 정보에 반응하는 양적 숫자와 실질적인 성공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단순히 트위터나 혹은 특정한 SNS의 사용자만을 놓고 모바일 SNS의 영향력과 그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 왜냐하면 트위터 등을 비롯한 여러 새로운 매체들은 기존의 인터넷 환경과도 친화성을 갖기 때문이다. 즉 직접적으로는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가 갖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터넷 환경과 갖는 친화성을 고려한다면, 그 영향력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전부에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어쨌든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의 사용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용자 수의 증가는 트위터 등이 지녔던 애초의 양적 한계와 질적 한계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것으로 짐작되며, 비록 사용자 수의 증대 자체가 그것의 영향력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트위

터 등이 가진 영향력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자의 급증은 권력에 대한 반응을 분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첫 번째는 권력에 반응하는 양적 밀도는 그로 인해 분명 증가될 것이란 사실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와 같은 SNS에 노출됨으로써, 이제 SNS를 통한 권력의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급증세로 인해 트위터와 같은 SNS에 반응하는 권력의 양적 밀도는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트위터 자체의 순수한 영향력을 평가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가시적으로 측정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사실이다. 예컨대 트위터 사용자가 특정한 사람들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이 가진 정치색에 근거하여 어떠한 정책이나 선거 결과에 트위터가 미친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그나마 쉬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위터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경우, 어떠한 선거결과나 정책의 변화를 트위터의 영향력 때문으로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엄밀히 말해 트위터를 통한 권력의 효과는, -달의 권력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트위터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잣대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트위터와 같은 SNS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대되는 만큼, 이제 트위터는 상수(常數)가 되어,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더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트위터 같은 SNS의 보편적 사용, 다른 말로 사용자의 질적 범주의 파괴는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진보적 성향을 갖는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에 국한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이용한다. 정치인들 역시 처음엔 주로 개혁적인 성향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트위터를 활용하였지만, 최근에 그 수준을 넘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많은 정치인들이 트위터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트위터 계정 개설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트위터로 끌어들인다. 이것은 트위터가 가졌던 특정한 정치색을 탈구시키면서 트위터의 영향력을 순수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가 그

반응 범주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행사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한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트위터와 같은 SNS의 중요성은 현재적 의미가 아닌, 그것이 가진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컨버전스 시대가 끼친 ‘네트워크화된 집단화’ 효과로 인해 트위터를 거치기 전에는 단순히 가능태적인 의미에서 집단적 동질성을 공유했던 이들이 트위터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서로의 의사와 견해를 확인하고 소통의 단계를 거쳐 결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록 그것의 방향성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트위터와 같은 SNS의 사용자들이 증대될수록, — 비록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그것의 영향력은 분명 증대될 것이란 사실이다. 다시 말해 현재 트위터가 가진 영향력을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의 가능성적 측면에서는 현재에 근거하여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진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러한 기술적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기술적 가능성과 휴머니즘적 가능성이 결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허나, 아직까지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 사례는 많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의 크기 자체가 무한히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디지털 컨버전스가 우리 사회와 권력 관계에 가져올 변화의 폭 역시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관계: 수평적 권력인가, 수직적 권력인가?

그렇다면 컨버전스 시대에 행사되고 있는 권력은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몇몇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일정 부분 다뤄진 바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컨버전스 시대 이후 사회운동 및 정치권력의 주요 특징은 양방향적 소통과 수평적 권력 관계 혹은 리더십 없는 사회운동의 등장 등으로 요약된다. 간

단히 말해 기존 제도권 내의 정당이나 권력기구들 뿐만이 아니라 탈근대 이후 부각되었던 이익집단이나 NGO의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그 자리를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시민운동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황주성 외 2009, 95).

마찬가지로 트위터 역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대표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이해된다(Comm · Burge 2009, 53). 과거의 미디어 체계에서는 기존의 언론 매체를 통해 편집의 과정을 거친 정보가 하향식으로 전달되었지만,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를 통해 이제는 일반 시민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Comm · Burge 2009, 22-24). 이러한 주장들은 곧 권력 관계에 있어 기존의 권력 주체들이 권력을 행사하던 위계적 질서가 수평적 질서로 대체되어 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물론 디지털 융합으로 인해 시민들 간의 온라인 관계가 심화되고, 그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자발적인 결속과 동원의 잠재력이 증대된 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가 현재 진행 중인 일종의 과도기라는 점에서 보자면, 다시 말해 과거의 권력 관계가 오늘날에도 일정 부분 지속되거나 혹은 착종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 관계를 아직까진 선불리 단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에 주목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트위터가 수평적 질서에 근거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전 세계 4천만 이상의 트위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트위터가 여타 SNS와 달리 ‘양방향 SNS’가 아닌 ‘일방향적(low-reciprocity)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라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이것은 트위터의 친구관계가 소통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주로 정보를 구독(subscription)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 그들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팔로우 숫자를 기준으로 한 탑 사용자(top user)들의 경우 대개 유명인사나 매스 미디어 등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팔로워들에게 다시 팔로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트위터 사용자들

의 77.9%가 일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단지 22.1%만이 양방향성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Flickr(68%), Yahoo!360(8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Kwak *et al* 2010 1-3).⁸⁾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트위터를 활용할 경우에도,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CEO 등을 중심으로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SERI 2010a, 3). 사실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을 찾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질서가 형성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상의 사실은 권력 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트위터는 기존의 권력 관계와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위계적 권력 질서가 트위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둘째, 권력의 효과에 있어서도 트위터는 비제도 권력보다는 제도 권력, 혹은 기성 권력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을 연구함에 있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에 따를 경우,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은 그 이전 시대의 권력과 비교하여 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 내의 소통이 일방향적이며, 나아가 팔로워를 많이 거느린 사람들과 리트윗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기존의 언론매체나 정치인 등이라는 사실은 기존 인터넷 매체에서의 정보의 흐름은 물론이요, 그 이전 시기의 정보의 흐름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다. 즉 단언할 수는 없지만,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가 ‘정보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정보의 흐름 자체가 일방향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권력의 작동 역시 일방향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8) 한편 트위터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Cha *et al* 2010, 4) 트위터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향적인 권력 관계에 의한 폐해가 더욱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을 수평적이며 양방향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기엔 분명 이르다고 하겠다.

물론 트위터의 경우 다른 SNS와 달리 정보전달의 매체로서 더욱 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의 경우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SNS가 트위터의 선례를 따라 모바일 SNS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트위터의 영향력이 더욱 더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트위터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결과가 주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앞서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해 권력의 주체인 A(갑)가 그것이 가진 권력의 수단이나 자원에 따라 미리 선협적으로 A(갑)로 규정받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권력의 주체 A(갑)가 곧 B(을)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흐름만을 놓고 본다면, —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해 권력의 수단과 자원이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과거의 권력의 주체였던 A(갑)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A(갑)로 기능하고 있으며, 과거의 권력의 대상이었던 B(을)는 여전히 B(을)로만 기능하고 있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대당이 아닌, 기성 권력과 새로운 권력과의 관계로 본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서도 갑과 을의 권력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던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 개념, 즉 “B(A)로 하여금 A(B)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끔 만드는 만큼의 A(B)의 능력, 혹은 자원(source)에 대한 점유와 수단을 통해 A(B)가 B(A)의 일정한 부문에 행사하는 양적인 힘” 역시 여전히 가설일 뿐이다. 즉 권력은 여전히 A만을 권력 주체로 호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컨버전스 시대의 트위터를 매개로 한 권력 관계가 일방향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자체가 수직적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과거에는 근접조차 할 수 없었던 기성 권력의 주체들을 트위터라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트위터 사용자라는 동일한 위치 하에서 만나고, 그들과 이러저러한 소통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말 것이다. 이제 소통 자체보다는 트위터 내부의 소통의 방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관점에서 컨버전스 시대가 가져온 변화와 트위터와 같은 SNS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성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권력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 트위터 내부의 소통 방향이 전통적인 권력 관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 관계에 가져올 변화의 의미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거대 기성 권력에 대항하고, 이를 비판·및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항권력 내부의 소통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시기의 권력 관계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성공

작금의 시기가 컨버전스 시대로 전화하고 있는 중이란 점에서,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한 권력의 성공을 논하기엔 아직 이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다분히 선행적인 성격을 갖는 까닭에, 본 연구 역시 이를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먼저 언급해야 할 사실은, 달(1957)의 주장처럼 권력은 그것에 반응하는 단순한 수준을 넘어, 실제 권력의 대상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응 범주의 증대는 단순히 ‘권력의 가능성’이 증대된 것을 의미할 뿐, 그것이 곧 ‘권력의 현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떠한 권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반응을 불러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대상들이 그러한 권력에 따라 자신의 행위나 판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실상 그 권력은 무(無)와 다름없다고 하겠다.

물론 컨버전스 사회의 도래로 인해 권력의 경제적 속성이 갖춰지면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권력에 반응하는 정도가 증대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미시적 권력 주체들의 권력 행사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권력 구조의 변화를 논하기 위한 잣대는 어디까지나 ‘성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컨버전스 사회가 아니었으면, 예컨대 트위터 등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오늘날 정치권력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물론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미 말했듯이 ‘지식권력’ 혹은 ‘정보권력’이 가진 비가시성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실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에 ‘지식권력’과 ‘정보권력’이 어느 수준에서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하고, 다사다난(多事多難)한 오늘날에 있어 트위터와 같은 SNS의 영향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통제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다. 예컨대 어떤 사람 A의 트위터에 어떠한 정보가 올라왔고, 또 그에 따라 그가 어떠한 행위나 판단을 변화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A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A의 변화가 트위터에 올라온 정보 때문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물론 막연히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추정은 추정일 뿐이며, 그 자체 객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당선된 원인 중 하나로 그가 선거 운동에 트위터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역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많은 언론들이 당시 투표율 증가와 야당의 선전 등이 트위터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선거 당시 권력의 당사자였던 정치인들 또한 그 성향을 막론하고 트위터 등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트위터 사용자들 간의 연결 고리가 일정 부분 투표율을 높이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중앙일보 2010. 6.3; 서울신문 2010. 6. 3).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의 투표율 증가 등이 사안이나 이슈의 중대성 때문인지, 아니면 트위터와 같은 컨버전스 사회의 특성 때문인지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물론 2009년 이란 대선 당시 시위가 확산되는 데 트위터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례에 근거해 트위터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논의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최소한 학문적인 수준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기 위해선 비밀관성을 지닌 몇 개의 사례보다는 일관성을 지닌 경향성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엄밀하게 말해 지금은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져온 어떤 정치적 결과를 논하기엔 분명 이른 시기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한국에 있어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져온 변화가 정치적인 수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증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 물론 이는 역설적으로 비단 선거나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여기서 논의의 초점을 국가와 시민들 간의 관계로 좁혀본다면), 시민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권력을 하나로 귀결시켜 국가의 행위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예 또한 많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쨌든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아직까지는 트위터의 사용자가 적고, 그 사용자의 층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해 최소한 학문적인 수준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엔 이르다.

다만 몇 가지는 확실하다. 첫째,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둘째, 트위터 등의 효과는 그것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즉 일방향 미디어인 트위터는 양방향 미디어인 다른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환경과 결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Comm · Burge 2009, 17). 셋째, 트위터 사용자가 증대되면서 오히려 트위터가 갖는 특정한 정치적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넷째, 트위터의 영향력의 증대와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는 앞으로 제도가 이를 어떻게 포섭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도가 이들을 포섭하지 못할 경우 트위터는 제도 외부에서 기성 권력에 대항한 새로운 주체들의 권력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고, 이것은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반해 제도가 이들을 포섭할 경우 이는 국가와 시민 간의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되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제3절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결과

1.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과 제도

권력과 제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카스텔의 권력에 대한 정의에 주목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권력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의 ‘관계’로 정의된다(Castells 2003, 38). 이것은 A(갑)가 행사하는 가시적인 힘 자체보다 A(갑)의 힘이 B(을)에게 전달되는 ‘관계’와 ‘매개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관계’에 따라 A(갑)의 힘은 다른 형태와 다른 세기로 B(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제도’는 바로 그러한 관계가 보다 구체화된 형태이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컨버전스 사회의 권력의 메커니즘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작동되고 있는지, 혹은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권력의 메커니즘과 어떤 관계 하에 놓여 있는지를 고민해 보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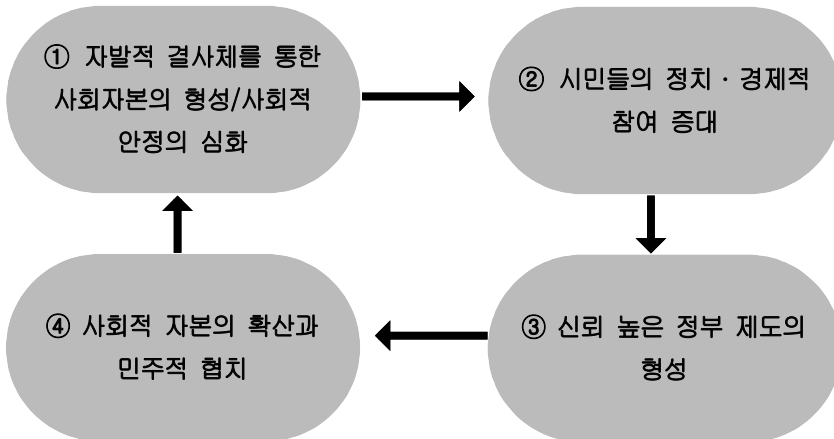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했듯이 트위터의 영향력의 증대와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는 앞으로 제도가 이들을 어떻게 포섭하는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도가 이들을 포섭하지 못할 경우 트위터를 통해 정치·경제적 문제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참여도 또한 현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제도란 권력이 행사되는 사실상의 유일한 합법적인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로가 막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주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통해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민주주의의 정착 및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트위터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들이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위터는 분명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것은 오늘날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경제적 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트위터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특화된 ‘디지털 컨버전스적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시장과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며(Rossteutscher 2008, 208-209), 이 때 국가의 '제도'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서로를 신뢰하는 개인들 간의 민주적, 협력적 행태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확대될 경우, 이것이 곧 신뢰성 있는 '정부제도'로 발전되고, 이것은 다시 시장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를 창출하기 위해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만약 국가가 시민을 평등하게 대하고 제도가 불편부당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경우 사회적 자본은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된다(Wolleb 2008, 373-374). 이상의 주장은 [그림 3-5]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5]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발전



이러한 논리를 속에 트위터를 적용시켜 보자. 우리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이후 개인들 간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행태가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를 통해 고양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예컨대 윤성이·송경재(2010)의 연구에 따르면 컨버전스

기기를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 능숙한 소위 ‘컨버전스 세대’⁹⁾의 경우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에 모두 정보화 시대의 웹1.0 세대와 비교하여 대부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발적인 시민들 간의 신뢰, 혹은 사회적 자본은 현재 그들이 신뢰하는 정부 제도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즉, 여기서 바로 ‘의식’과 ‘제도’ 간의 간극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가설대로라면, 이러한 상황은 곧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제도가 자신들을 불편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적인 수준에서 신뢰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림 3-6]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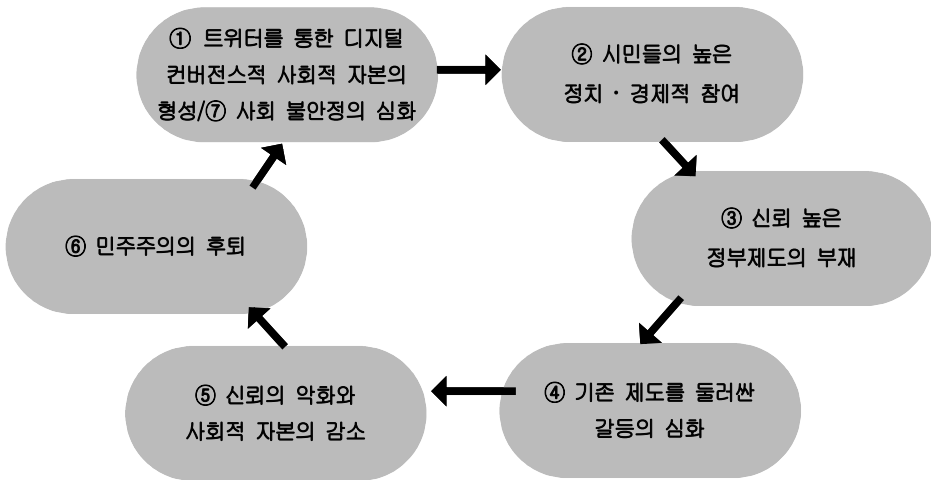
[그림 3-5]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자본의 이상적인 사이클은 ①에서 ②, ③, ④를 거쳐 다시 ①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 전체로 확산된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참여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민주적 협치가 강화되어, 사회는 보다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트위터와 같은 SNS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사이클은 [그림 3-6]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즉 ①에서 출발하여 ①로 돌아오는 형태가 아니라, ⑦로 귀결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①에서 출발하여 ①로 귀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신뢰 높은 사회 제도(즉 ③)’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트위터 등을 통한 정치적 의견 개진을 적극 장려하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한국은 모바일 SNS를 통해 개진된 정치적 의견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루트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예컨대 지난 6·2

9) 여기서 의미하는 컨버전스세대는 “생물학적 세대가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양식의 변화에 친숙하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집단”으로,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ICT 활용에 따라 규정된 개념이다(윤성이·송경재 2010).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제93조 1항¹⁰⁾에 근거하여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에 제한을 가했으며, 2010년 4월에는 트위터 이용 선거법 위반으로 첫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0. 4. 30). 이는 다른 말로 대표적인 기성 권력이라고 할 정부가 트위터 등을 통해 집단화된 새로운 세력을 권력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의 부재는 트위터를 통해 행사되는 어떤 정치적 힘의 행사를 비제도권 내에 머물게 하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그림 3-6] (트위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제도의 부재



물론 제도는 언제나 현실에 변화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도란 모름지기 기본적으로 각각의 역사적 시기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탓에(Castells 2003, 38), 새로운 변화를 미리 앞서 반영하기보다는 기성의 권력 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권력 관계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기성 권력 집단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계를 굳이 변화시키거나 바꿀 이유를 가지지 못한다.

10)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살포, 상영, 게시할 수 없다’(선거법 제93조 1항)

그러나 만약 기존의 제도가 제도를 둘러싼 당사자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도의 부재 혹은 제도에 대한 불인정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혹은 권력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갈등을 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감정적인 형태로 표출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력의 수준은 낮아지고, 제도를 실행하는 국가 역시 제도를 통해 어떤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모름지기 제도는 사회 내의 요구와 불만을 수용하여 이를 체제 내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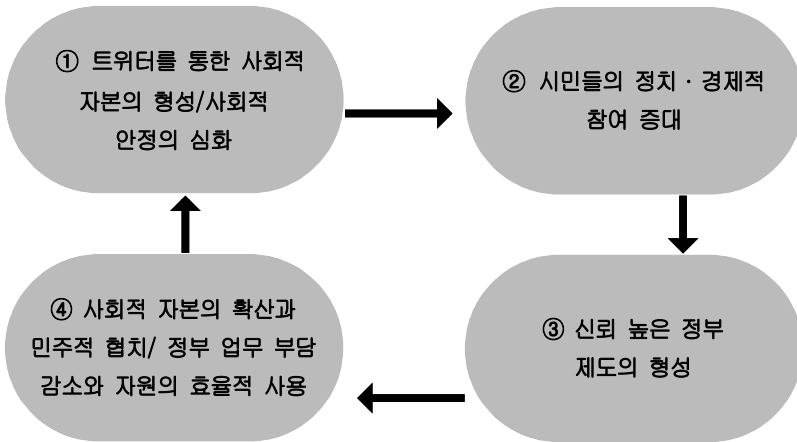
나아가 국가는 제도의 변화와 수용을 통해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고양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의 갈등과 불만을 제도 내에서 해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나 사회의 발전 및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다. 최근 한 언론사가 법학자와 정치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트위터의 선거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0, 3. 10).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조차 변화를 ‘제도’ 내로 수용하여, 사람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얻는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사회적 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자극하고, 지배적인 가치를 지지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는 데 있어 일종의 기름칠과 같은 기능을 해주기 때문이다(Rossteutscher 2008). 특히 컨버전스 시대에 들어 정당과 같은 대의기능의 약화로 인해 국가의 업무 부담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 반드시 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정보화 이후 무수한 권력주체들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요구들을 정부 혼자서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 컨버전스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과의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이미 잘 보여주고 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 많은 시민들은 이미 정부의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많은 일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한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의 형성은 국가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잉여 자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적 효율성을 고양시킬 것이다.

권력은 ‘관계’이다. 달리 말해 권력은 ‘관계’를 둘러싼 당사자 서로 간의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만약 각각의 권력 주체들이 서로를 권력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혹은 기성의 제도가 변화된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갈등과 권력 관계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해소될 것이며, 이것은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그림 3-7] (트위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신뢰 높은 제도의 형성



국가는 시민 사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들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제도 내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 SNS를 통해 조직되고 형성되는 시민 집단을 컨버전스 시대 하의 새로운 권력의 당사자이자 동반자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고 하여 소통을 한다고 볼 순 없다.¹¹⁾ 또한

11) 최근 청와대와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여 국민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정을 개설했다는 사실 보다는, 실제 그것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소통을 한다고 하여 그 자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만도 없다. 무엇보다 그러한 소통의 결과가 정책의 수준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그것이 일회성적이고 단발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통의 결과를 다양한 제도를 통해 권력 관계로 포섭하는 일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권력의 재구조화

만약 권력수용자인 B의 의식 수준과 제도가 불일치할 경우, B의 요구는 비제도적인 루트를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사회는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의식과 제도 사이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것이 결국 사회 내 권력 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신뢰의 정도를 관습화하게 되어, 차후에는 이러한 ‘관습화된 신뢰의 정도’가 이익을 둘러싼 갈등에 있어 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 자체를 사전적으로 미리 규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의식과 제도 간의 불일치와 그것의 방치는 차후 권력의 작동방식을 왜곡하여 사회의 발전 경로 자체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권력을 둘러싼 의식과 제도 간의 간극의 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러한 간극으로 인해 권력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식이 어떻게 ‘재구조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권력의 재구조화는 분명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사회·기술적 변화가 가져온 결과인 동시에 컨버전스 사회 내에서 권력이 재생산되는 원인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컨버전스 사회의 정치권력을 분석하는 시각은 단순한 행태적 시각, 관계적 시각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컨버전스 사회 하의 권력이 구조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혹은 재생산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하에서 권력은 어떤 형태로 재구조화되고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컨버전스 세대가 보여주는 행태는 현재의 제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다만 아직 행태적인 수준에서도 뚜렷한 일관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만큼, 구조적인 수준에서 그 변화를 예단하기는 너무 설부르다.

따라서 여기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의 구조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보다는 당위적인 접근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선형적인 수준에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은 아직까지 지난 시대의 유산을 상당 부분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위계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일정 부분 작동되고 있으며, 권력 자원에 있어서도 제도 권력과 비제도 권력 간의 불균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기성 권력이 컨버전스적 의미의 권력 수단만이 아닌, 미시적 권력 주체들의 그것을 압도하는 권력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컨버전스가 가져온 변화를 낙관적으로 예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자체 내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로 인해 기존의 권력 관계와 권력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고는 사실상 말하기 힘들어 보인다. ‘권력’의 구조적 속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A는 B의 의사 자체를 미리 결정지음으로써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A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B의 의식과 욕구를 미리 조정함으로써 B로부터 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Bachrach · Baratz 1970: 6; Lukes 1992: 44-45). 이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에서도 여전히 기성 권력(즉 A)은 자신의 권력 자원과 수단(제도를 포함한)을 활용하여 권력의 대상(즉 B)에게 ‘구조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권력 구조가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계속 부합할 것이라고 말할 순 없다. 게다가 스트레인지(1988)의 주장처럼 B에 대해 A가 행사하는 ‘구조적 권력’을 넘어서는, 즉 ‘A와 B의 의도’를 넘어서 ‘구조적 권력 그 자체’가 또한 분명 존재한다. 이것은 권력을 둘러싼 행위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한다(Strange 1988, 23-25). 예컨대 환경과 기술의 변화는 서서히 권력 1988 간의 상호작용의 룰(rule)을 바꿈으로써 순차적으로 권력 1988의 행위패턴과 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제도적인 수준에서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작금의 디지털 컨버전스는 스트레인지가 얘기하는 그러한 ‘구조적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구조적 권력’이 어떠한 ‘구조적 권력’이 될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아마 각 국가와 사회마다 그러한 변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받아들일 것이며, 저마다 다양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즉 어떤 국가와 사회는 그러한 변화를 순탄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그러한 변화에 저항하고, 그 과정에서 숨은 사회갈등을 노출하는 국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적 권력’은 국가마다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즉 해당 사회 권력 당사자들의 의식과 이들 간의 부단한 상호 작용이 권력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A가 B의 ‘의식’을 단순히 주조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 지나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보화 시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특히 컨버전스 시대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구조적 권력’이 끼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와 같은 기성 권력의 판단과 해석을 끝이곧대로 듣지 않는다. 이것은 기존의 권력 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포섭할 수 없는 사회 내의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관계의 비(非)포섭은 그와 관련된 갈등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야기되고 있는(혹은 앞으로 야기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또한 제기한다. 위계적인 권력 구조에 따른 강압적인 방법에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A와 B 상호 간의 협력과 대화의 증진을 통해 민주적으로 이를 해소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 모두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른다. 즉 문제는 더 이상 ‘해석’이 아닌 ‘실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정치의식과 시민참여, 정치조직 그리고 정책결정

이제까지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제4장에서는 분과연구로써 디지털 컨버전스 세대의 정치의식과 시민참여의 특징과 정치조직의 변화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정책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제1절의 정치의식과 시민참여의 변화는 웹1.0세대와 구별되는 컨버전스 세대 정치의식과 시민참여의 특징을 서베이를 통해 조사한 결과이며, 제2절의 정치조직의 변화는 대표적인 정치조직으로서 정부·정당·시민사회의 컨버전스 조직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3절의 컨버전스 시대의 정책결정의 변화는 정책결정 주체의 변화구조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변화하는 구체적인 컨버전스 사회의 모습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본다.

제 1 절 정치의식과 시민참여¹²⁾

1. 컨버전스 세대 개념과 조사 개요

컨버전스 세대의 정치의식에서는 컨버전스 세대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ICT 활용효과에 주목한다. ICT 활용효과는 특정 기술 활용에 따른 세대 구분을 의미하는데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간의 연령효과 중심의 분석이 아닌 동일 연령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ICT 활용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컨버전스 세대라는 개념은 여러 세대간의 상이한 태도와 행태는 물론 동일 세대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상이한 태도와 행태를

12) 자세한 서베이 결과 수치 및 설문 항목 등에 대해서는 윤성이·송경재(2010)의 연구결과 참조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의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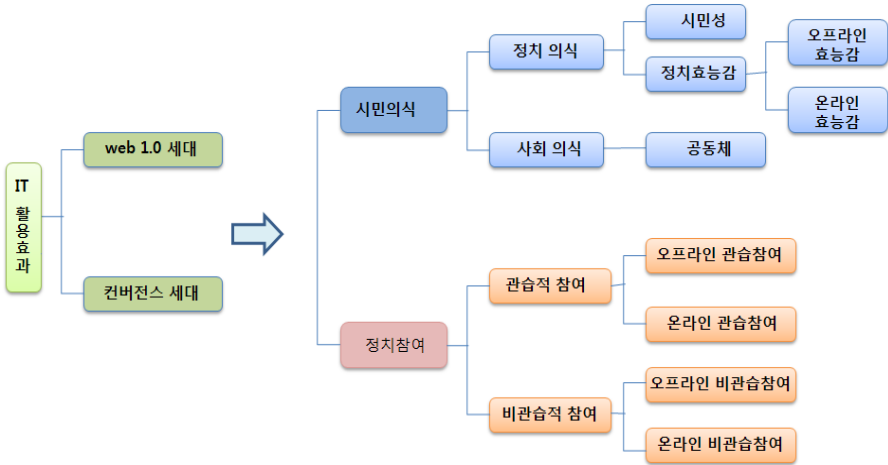
따라서 컨버전스 세대를 ‘생물학적 세대가 아닌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소통 양식의 변화에 친숙하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가치를 변형시키고 주도하는 집단’으로 정의하며 컨버전스 세대의 특징 분석과 아울러 ICT 활용변수가 컨버전스 세대의 의식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며, 이를 위해 ICT 활용변수를 비롯한 연령·소득·학력·성별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ICT 활용효과에 있어서는 크게 인터넷 서비스와 디바이스 이용행태를 구분하였는데,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인터넷 디바이스의 종류보다는 인터넷 서비스에 의한 구분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¹³⁾ 가운데 SNS와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룹은 노트북, 스마트폰, 휴대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의 사용을 고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ICT 활용세대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행태에 따라 다른 의식과 행태를 가진 세대인 것이다. 뉴스 댓글, 포털 게시판, 토론방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그룹을 웹1.0세대, 사이버커뮤니티, 블로그를 주로 이용하는 그룹을 웹2.0세대라고 한다면,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을 이용하는 그룹이 컨버전스 세대로 분류되는 것이다.

ICT 활용효과에 따른 세대별 시민의식은 크게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의식의 경우에는 시민성과 정치효능감이, 사회의식의 경우에는 공동체의식이 의미있는 하위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치효능감의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참여효능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실제 조사는 2010년 8월 23~27일까지 1,05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실시하였다.

〔그림 4-1〕 정치의식 조사 설계도



첫째, 성별 표본의 특징은 웹1.0세대보다 컨버전스 세대가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웹1.0세대가 남성이 68명(45.6%), 여성이 81명(54.4%)였고 컨버전스 세대는 남성 95명(49.2%), 여성 98명(50.8%)이었다. 남성과 여성에서 컨버전스 세대는 일반 인구구성비와 비슷한 표본이 추출되었다.

둘째, 연령별 구성비에서 웹1.0세대와 컨버전스 세대 간의 격차는 크게 발견되었다. 웹1.0세대는 주로 고연령층이 많은 반면, 컨버전스 세대는 저연령층이 많았다. 이를 층위로 본다면, 웹1.0세대가 고연령층이 많은 반면, 컨버전스 세대는 50대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가 월등히 많았다.

셋째, 학력별 편차는 연령보다 큰 차별성이 나타난다. 웹1.0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이 58명(38.9%), 대학교졸업 이상이 68명(45.6%)이다. 한편, 컨버전스세대는 대학교 졸업이상이 116명으로 전체 표본 중에서 60.1%에 달한다.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인 29명(15.0%)를 합하면 75.1%가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에 해당되었다. 이는 웹1.0 세대에 비해 컨버전스 세대가 보다 고학력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컨버전스 세대 구성에서 기술 수용성과 접근성이 수월한 고학력층이 더 많음을 알려준다.

넷째, 가장 뚜렷한 차이는 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구성이 웹1.0세대가 컨버전스 세대보다 2배 많고, 반대로 601만원 이상 소득자는 3.5배 적다. 이는 저소득층의 웹 1.0세대 비중이 높고, 고소득층의 컨버전스 세대 구성비가 높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구성비는 컨버전스 세대가 웹1.0세대와는 다른 세대임을 알려준다. 생애주기와 코호트적인 세대구분과는 달리 디지털기술의 제한적 수용에 따라 성, 연령, 학력, 소득의 편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이 우리가 주요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컨버전스 세대이다.

2. 정치의식과 시민참여

가. ICT 활용세대와 시민의식

시민의식의 측정결과, 웹1.0세대와 컨버전스 세대는 시민의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는 세대별 ICT 활용변수 및 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시민의식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개별 독립변수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는 연령만이 시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ICT 활용세대와 시민의식의 차이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df	유의확률
웹1.0세대	149	3.03	0.46	-7.369	340	0.000
컨버전스세대	193	3.39	0.41			

그러나 ICT 활용변수를 투입한 2단계 모형의 경우, 5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는 시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술 활용 패턴과 시민의식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t	유의수준(Sig)
1단계	성별	0.028	0.061	0.455	.000***
	연령	-0.061	-0.154	-2.868	.004**
	학력	0.034	0.025	1.385	.167
	소득	0.036	0.033	1.089	.277
	수정된 $R^2=0.023$, $F=2.991^*$, $N=342$				
2단계	성별	0.031	0.059	0.527	.599
	연령	-0.016	0.022	-0.745	.457
	학력	0.009	0.024	0.384	.701
	소득	0.008	0.032	0.246	.806
	ICT활용세대	0.174	0.033	5.313	.000***
	수정된 $R^2=0.096$, $F=8.232^{***}$, $N=342$				

* $p<.05$, ** $p<.01$, *** $p<.001$

1) ICT 활용세대와 정치의식

(1) ICT 활용세대와 자기실현적 시민성

시민성은 정치의식 수준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시민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정치의 최근 경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좋은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강하게 노출된 시민들은 기존의 권위와 정치적 질서에 대한 의무보다 자기표현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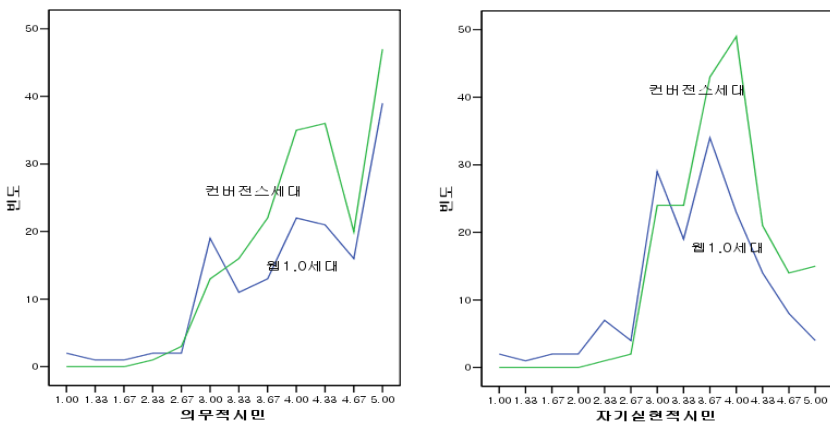
〈표 4-3〉 시민성 측정 문항

구분	측정 문항
의무적 시민성	법과 규율을 준수하기
	세금납부 등 국민의 의무에 충실하기
	투표에 참여하기
자기실현적 시민성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기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조한다. 연구에서는 전자를 ‘의무적 시민성’, 후자를 ‘자기실현적 시민성’으로 구분하여 ICT 활용세대 간 시민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이, 컨버전스 세대와 웹1.0세대 모두 자기실현적 시민성보다 의무적 시민성이 높았다. 이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투표와 같이 제한된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시민유형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약 60%정도가 20~30대로 구성된 컨버전스 세대가 웹1.0세대보다 두 유형의 시민성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은, 자기실현적 시민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서구 선진국가의 20~30대와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 민주적 시티즌십을 연구한 달톤(Dalton 2009)의 경우, 젊은 세대 사이의 새로운 민주적 시티즌십으로 관여적 시민성을 꼽는다.

[그림 4-2] ICT 활용세대와 시민성



* 5점 척도 기준(1=매우 낮다, 5=매우 높다)

그런데, 의무적 시민성과 자기실현적 시민성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ICT 활용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무적 시민성에 있어서 웹1.0세대와 컨버전스 세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자기실현적 시민성의 경우, 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웹1.0세

대의 자기실현적 시민성은 평균 3.51점으로 나타났고, 컨버전스 세대는 평균 3.86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판단할 때, 컨버전스 세대가 웹1.0세대보다 자기실현적 시민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컨버전스 세대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자긍심(self-worth), 매력감 혹은 효능감을 얻는다(Krasnova, Hildebrand, Cunther, Kovrigin, Nowobilska 2008). 이를 통해 참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러한 결과는 컨버전스 세대의 참여지향성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긍심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른 참여자의 평가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고, 매력감 혹은 효능감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기 표출을 통해 얻어진 개인적인 느낌을 지칭한다.

6개의 시민성 측정 항목 중에서 자기실현적 시민성을 나타내는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대한 의식 차이가 각 연령집단별 ICT 활용 패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표 4-4>를 보면 동일 연령 집단에 속 하더라도 어떤 ICT활용 패턴을 보이는가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단체 참여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서 상이한 의식을 보였다. 20대, 30대, 40대, 50대 가운데 컨버전스 세대는 웹1.0세대보다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 시민의 조건으로써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4-4>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연령	ICT 활용세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df	유의확률
20대	웹1.0세대	15	3.13	0.99	-2.103	77	0.039*
	컨버전스세대	64	3.64	0.80			
30대	웹1.0세대	32	3.19	0.97	-2.385	79	0.019*
	컨버전스세대	49	3.61	0.64			
40대	웹1.0세대	30	3.17	0.65	-1.998	67	0.050*
	컨버전스세대	39	3.51	0.79			
50대	웹1.0세대	38	2.79	0.93	-2.277	50	0.027*
	컨버전스세대	14	3.5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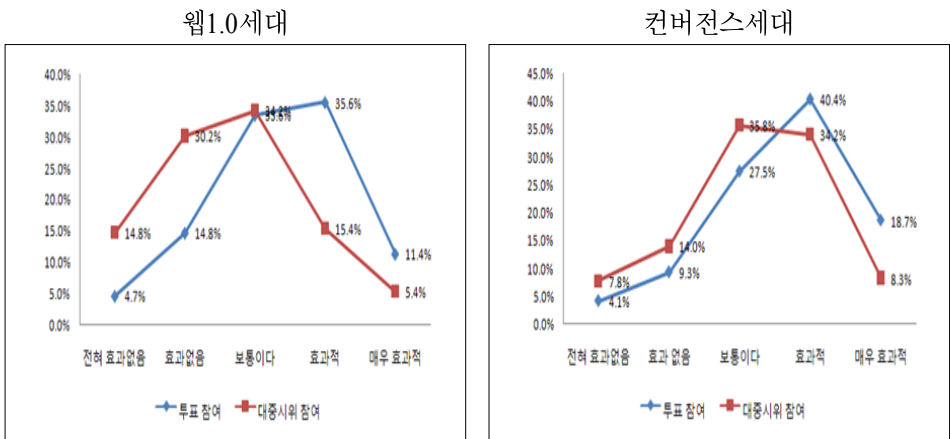
*p<0.05

(2) ICT 활용세대와 정치효능감

정치의를식을 대표하는 또 다른 요소는 정치효능감이다. 정치효능감은 ‘개인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일종의 정치적 자신감 혹은 적극성이다. 정치효능감은 지금과 같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다. 일반효능감은 정치일반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으로써, “정치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응답자들의 동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ICT 활용세대와 일반효능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1.0세대는 평균 3.76점, 컨버전스 세대는 평균 3.95점으로, 웹1.0세대보다 컨버전스 세대가 정치일반에 대한 효능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참여효능감은 정치참여 수단에 대한 효능감을 일컫는다. 온라인 정치효능감은 웹1.0세대보다 컨버전스 세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정치효능감은 i) 시민단체 주도의 대중 시위에 참여하기 ii) 나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정치 후보자에게 투표하기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오프라인 참여효능감 역시 컨버전스 세대가 웹1.0세대 보다 더욱 높다.

[그림 4-3] ICT 활용세대와 오프라인 참여효능감



오프라인 참여효능감의 경우, 컨버전스 세대와 웹1.0세대 모두 참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투표참여’를 꼽았다. 그 중에서도 웹1.0세대보다 컨버전스 세대가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를 더욱 선호하였다. [그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투표참여’에 대한 참여효능감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웹1.0세대는 47%, 컨버전스 세대는 59.1%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투표율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가 투표와 같은 관습적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앞에서 보여준 ‘ICT 활용세대와 시민성’의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자기실현적 시민성의 경우 웹1.0세대보다 컨버전스 세대가 훨씬 높은 친화성을 보이지만, 여전히 모든 ICT 활용세대가 의무적 시민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즉, 현재 한국사회는 새로운 의식 혹은 문화를 형성하는 ‘변화 조짐’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몇몇 새로운 참여 형태로 분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간혹 기존의 제도 혹은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동일한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ICT활용 패턴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참여효능감에서 뚜렷한 의식차이를 보인다. 동일 연령 집단에 속하더라도 어떤 ICT 활용 패턴을 보이는가에 따라 오프라인 참여효능감에 있어서 상이한 의식을 보였다. 예컨대, 20대에 속하더라도 웹1.0세대보다 컨버전스 세대의 오프라인 참여효능감이 더욱 크다. 이러한 결과는 30대와 40대에서도 동일하다. 특히 20대와 40대의 웹1.0세대와 컨버전스 세대 간의 ‘시민단체 주도의 대중시위 참여’에 대한 효능감은 30대보다 그 차이가 더욱 크다. 더욱이 컨버전스 세대의 경우 2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오프라인 참여효능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내에서 웹1.0세대와 컨버전스 세대 간의 오프라인 참여효능감의 차이가 더욱 큰 이유는 이들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한 정치참여문화를 이끈 경험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참여자 대부분이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정치적 소통을 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40대 내에서의 ICT활용세대별 차이는 40대의 대부분이 민주화세대인 것을 고려하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대중시위에 대한 높은 참여효능감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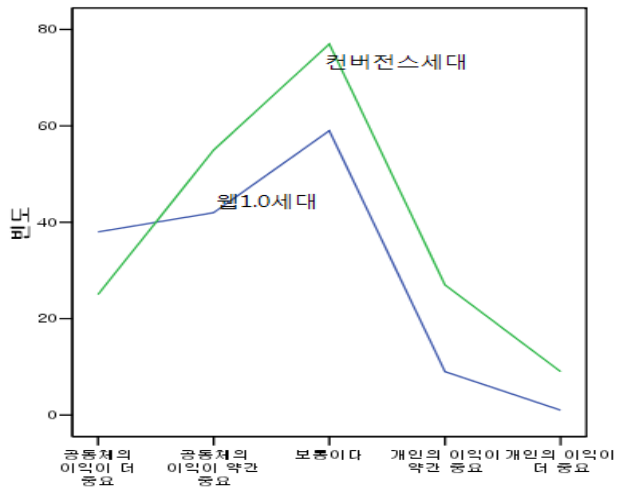
〈표 4－5〉 시민단체주도의 대중 시위에 참여하기

연령	ICT활용 세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df	유의확률
20대	웹1.0세대	15	2.13	1.13	-3.075	77	0.003*
	컨버전스세대	64	3.07	1.06			
30대	웹1.0세대	32	2.75	1.02	-2.342	79	0.022*
	컨버전스세대	49	3.29	1.00			
40대	웹1.0세대	30	2.60	0.72	-4.460	67	0.000*
	컨버전스세대	39	3.49	0.88			

2) ICT 활용세대와 사회의식

시민의식을 대표하는 또 다른 하위지표는 사회의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충돌 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ICT 활용세대와 사회의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1.0 세대는 평균 2.28점, 컨버전스 세대는 평균 2.68점으로 두 집단 모두 여전히 공동체의 이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4〕 ICT활용세대와 사회의식



특히, [그림 4-4]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경우 컨버전스 세대보다 웹1.0세대가 훨씬 많았다. 이에 반해 컨버전스 세대의 경우 개인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컨버전스 세대가 웹1.0세대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ICT 활용 패턴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의식에서 역시 뚜렷한 의식차이를 보인다. 동일 연령 집단에 속하더라도 어떤 ICT 활용 패턴을 보이는가에 따라 사회의식에 있어서 상이한 의식을 보였다. 20대, 30대, 40대 컨버전스 세대의 경우 20대, 30대, 40대 웹1.0세대보다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개인의 이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의 웹1.0세대와 컨버전스 세대 간의 사회의식 차이가 훨씬 뚜렷하다.

사회경제적 변수와 오프라인 참여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일반효능감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실현적 시민성과 온라인 참여효능감의 경우 ICT활용 효과를 투입할 경우 시민의식에 있어서 더욱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기실현적 시민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의 설명력이 1.9%인 반면, ICT 활용 효과를 투입하였을 경우, 5.6%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참여효능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의 설명력은 1.4%이나 ICT 활용 효과의 경우 5.4%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ICT 활용효과와 시민의식 간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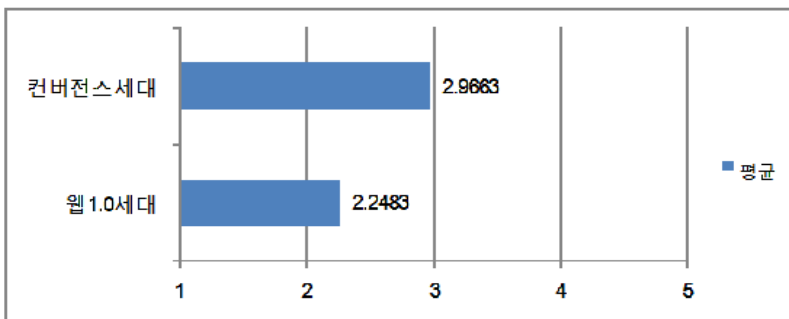
나. ICT 활용세대의 사회참여

ICT 활용세대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먼저, 오프라인 관습참여인 선거에서 컨버전스 세대가 웹1.0세대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온라인 관습참여를 살펴보았는데, 웹1.0세대와 컨버전스 세대 온라인 관습참여는 차별성이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역시 온라인 관습참여도 컨버전스 세대 참여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런 결과는 기술적 요인에 의한 온라인참여 유형

의 확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Tapscott 2008; Loader 2007). 로터의 지적대로 정부, 정치관련 홈페이지에 글을 쓰거나 이메일을 쓰는 것은 기술친화적인 세대가 익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웹1.0세대와 컨버전스 세대 간의 인터넷 사용시간 차이도 살펴보아야 한다. 설문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웹접속이 가능한 컨버전스 세대는 정부나 정치관련 사이트 접속이 수월하다는 기능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관습참여의 2공간(온라인－오프라인) 행태를 하나의 변인으로 묶어서 ICT 활용세대와 관습참여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웹1.0세대와 컨버전스 세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컨버전스 세대가 보다 긍정적으로 참여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20대~50대까지 모두 컨버전스 세대가 관습적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30대와 40대의 연령별 관습참여 경향이다. 20대와 50대에 비해 이들 연령은 보다 적극적인 참여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대, 50대 웹1.0세대는 평균적도가 2점대에 머물렀지만 30대와 40대는 웹1.0세대가 2.27점, 2.18점에 그친 반면, 3.01점과 3.04점으로 보통수준을 넘는 참여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림 4-5] ICT 활용세대와 관습 참여행태 단순비교



그렇지만 여기서 유념해서 살펴볼 것은 통계적 유의성과는 다른, 관습참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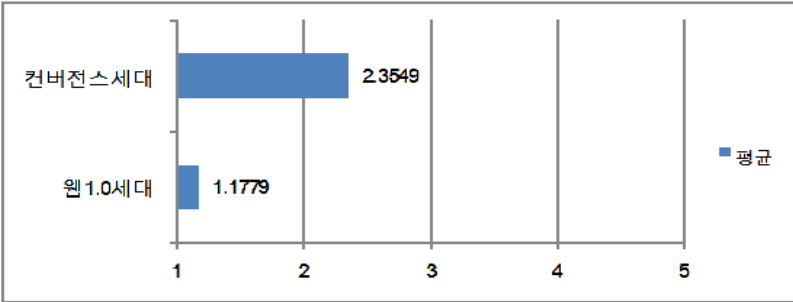
이다. 컨버전스 세대가 통계적으로는 관습참여 지향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척도 수준이 보통기준인 3점에도 미치지 못한다. 후술하겠지만, ICT활용세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존재하고, 컨버전스 세대가 참여적임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제 참여에서의 층위 단순비교는 컨버전스 세대 참여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컨버전스 세대는 오프라인 비관습참여 면에서도 관습참여와 같이 더 적극적이었다. 평균값이 웹1.0세대는 가장 부정적인 응답 ‘전혀 없다’인 1점에 가깝지만 컨버전스 세대는 2.1762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컨버전스 세대가 기존 세대이론에서의 코호트적인 차이가 아닌란 전제에서 기술수용성과 오프라인의 길거리정치 측면에서 상대적인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음은 온라인 비관습참여를 살펴보았다. 온라인 비관습참여 역시 ICT활용세대 간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오프라인 비관습참여와 같이 온라인 비관습참여도 컨버전스 세대의 참여지향성이 더욱 강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온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관습참여 분석과 같이 더 큰 격차로 웹1.0세대보다 높은 참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정치토론이나 시위참여는 웹1.0세대가 1.1678점에 머문 반면, 컨버전스 세대는 2배가 넘는 2.5337점을 기록했다. 이는 오프라인의 비관습참여의 2.1762점보다 높은 응답이다.

연구는 관습참여와 같은 연구절차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변인을 통합하여, 비관습참여행태의 전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ICT활용세대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비관습참여가 ICT활용세대 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독립변수들이 모두 ICT활용세대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결과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과정이 할 수 있다.

(그림 4-6) ICT 활용세대와 비관습참여행태 단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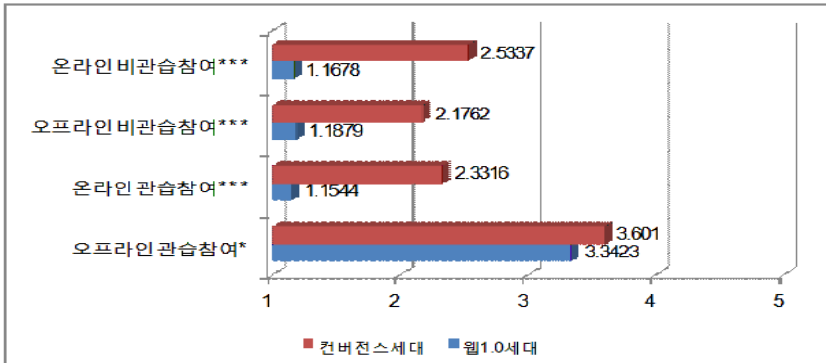
다. ICT 활용세대의 정치참여

첫째, 각 참여유형을 비교하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응답수준(level)의 척도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오프라인 관습참여는 다른 참여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웹1.0세대의 참여도 다른 3가지 참여유형(온라인 관습참여, 오프라인 비관습참여, 온라인 비관습참여) 중에서 가장 높은 3.3423점이다. 이는 컨버전스세대의 평균인 3.601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동일한 웹1.0세대 집단내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낮은 참여가 발견된다.

둘째, 오프라인 관습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컨버전스 세대 참여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프라인 관습참여의 세대간 척도차이가 0.2582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큰 차이가 산출되어 3가지 참여유형 모두 척도로는 1점 이상, 비율로는 2배 이상의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관습참여를 제외한 시민참여 격차는 컨버전스 세대가 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려준다.

셋째, 온라인 참여형태만을 다시 구분하여 비교한다면, 웹1.0세대와 컨버전스 세대 격차는 더욱 크다. 참여유형이 온라인 기반이라는 특성으로, ICT 활용능력에 따른 구분의 차이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모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4-7〕 ICT 활용세대와 참여유형별 평균비교



* p<0.05, ** p<0.01, *** p<0.001

넷째, 가장 중요한 함의로서, 4가지 참여유형에서 컨버전스 세대가 통계적으로 참여지향성이 높고 결과도 유의미하지만, 참여유형의 평균값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웹1.0세대에서는 더욱 낮은 평균값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웹1.0세대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에 근접한 1.5~1.9점에 머물렀다. 그리고 컨버전스 세대도 통계적으로 검증은 되지만, 2.1~2.6점 수준이다. 이러한 평균값은 참여의사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컨버전스 세대가 웹1.0세대에 비해 참여지향성은 분명히 강하고 통계적으로 증명은 되지만, 그 결과가 모두 상대적인 차이라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통계적으로 검증되지는 못하지만, 비교분석을 통해서 현 단계 컨버전스 세대의 시민참여 특성을 맥락적으로 재해석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준다.

제 2 절 정치조직의 변화¹⁴⁾

근대 산업사회에서 정치사회적 행위의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했던 정치조직의 개념과 성격은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전과 함께 이른바 ‘디지털 정치조직’의 비중이 높

14) 조희정·강원택(2010)의 연구결과 참조

아지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와 세대가 구성하는 디지털 정치조직은 벤처 기업 붐 이후 활성화된 새로운 기업조직에서 촉발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디지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는 개인주의화를 기반으로 과거의 위계성과 질적으로 다른 창의성과 소통성을 통해 정치조직의 질적 변화에 새로운 인적 자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은 그 조직방식이나 수단에 있어서 새롭다. 즉, 위계정보보다는 수평성이나 연결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수단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치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원으로서 조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핵심적 위상과 작동방식의 변화 그리고 조직이 구성하는 구조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디지털 정치조직은 ‘ICT를 활용하여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평적이고 관계적인 구조를 지향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제도적·비제도적 조직체(혹은 조직화 경향)’를 의미한다. 즉, 통치기술, 공적 업무, 권력과 합의, 권력과 자원배분으로서의 ‘정치’과정에서 개인이 아닌 집단화된 행위자가 ICT를 활용하여 정치행위를 수행하고 그것이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조직은 디지털 정치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정치조직 개념은 명확히 확립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변화를 서술하는 하나의 형성개념에 가깝다. 즉, 구체적으로 디지털 정치조직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그것이 제도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디지털 정치조직이라는 개념은 기술적 접두어를 첨가한 것에 그치는 개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정부·정당·시민사회의 변화

가. 정부의 변화

정부 조직의 변화는 정부 2.0서비스를 통한 참여·공유·개방을 지향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공유 혹은 개방형 정부 2.0 서비스로서 미국의 컨택센터, 데이터 거브(data.gov), 미국의 데이터 SF(dataSF.org,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등과 대표적인 참여형 정부 2.0 서비스로서 스페인의 C3Cat 서비스(Catalonia Citizen-Care-Centric,

www.gencat.cat), 그리스 eDialogos의 정책결정 사례(www.edialogos.gr), 네덜란드의 Virtual Cities(www.virtueelnl.nl), 영국의 ‘Fix My Street’¹⁵⁾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2.0 서비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XML, 오픈 AP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지역서비스, 범죄정보 서비스 및 선거정보 서비스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경찰법 개정안을 위키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마련한 바 있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이외에 독일·호주 등에서도 정부 2.0을 이용한 공공·민간 협업체제 구축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 될 것이며 또한 서비스의 확대만큼 정부조직의 변화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2.0의 추진에는 강력한 공공정보 개방·활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기관이 설치되고 있다.

미국은 예산관리국과 총무청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담당할 조직으로서 백악관 내 시민참여국(White House of Public Engagement)이 설치되었다. 이 시민참여국에서는 정부-시민간 지식과 정보, 의견과 피드백 교류 등 ICT를 활용한 시민참여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참여국은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온라인 톨 도입 및 전략 수립, 온라인 포럼 및 행사 개최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블로그를 통한 자유로운 백악관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정부와 시민간 활발한 소통의 매개로 활동하고 다양한 국정이슈 및 공공정보의 개방과 연계를 통해 시민참여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김희연 2009: 34-35).

총괄적으로 미국의 정보화추진조직의 특성은 첫째, 조직구성에 있어서 강한 리더십과 e-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을 통해 관련 조직이 창설되고 관련조직들간의 역할 분담의 기초가 마련되는 경향이 강한데, 대통령이 직접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적 배열을 창출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리더

15) 디지털타임즈(2010년 1월 18일)

십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은 내각 사무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총리실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디지털 참여국장(Director of Digital Engagement) 보직을 신설하였다. 디지털 참여국장은 정부와 시민간의 소통향상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이행, 정부기관 대내외의 업무조정과 협업체계 개선, 그리고 디지털 통합의 근간이 되는 지식정보관리, 신기술 도입 및 자문단 창설 등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공공정보와 데이터, 지식관리를 개선하여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POI 태스크포스의 권고안 이행 및 향후 과제를 추진, 지식위원회 및 국가기록물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업 유지, 웹2.0 소셜 네트워킹, 클라우드 컴퓨팅, 트위터 등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도입 및 기술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POI(Power of Information) 태스크포스팀이 제안한 공공부문의 정보 공유 및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안의 이행과 향후 추진을 담당한다(김희연 2009: 35-36).

나. 정당의 변화

정당의 온라인 활동은 인적·물적 자원 활용, 후보자와의(혹은 후보자간의) 관계 강화 및 지지자 구축, 정책발전에의 도움, 엘리트 충원,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다섯 가지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Lilleker, Darren G. · Pack, Mark · Jackson, Nigel 2010: 107). 이는 정치학에서 논의하는 정당의 일반적인 기능인 정치사회화, 대표 충원, 정책 채택 및 실현, 득표 극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목적이지만 정당의 온라인 활동에서 원래의 기능보다 좀 더 강조된 내용이 있다면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후보자와의 관계강화 및 지지자 구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 변화와 함께 과거에는 추상적인 정치사회화 수준에서 지체되어 있는 정당이 온라인에서 위기를 극복하거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하면서 후보자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지지자 기반 확대 만큼 후보자(혹은 지지자)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회자본 연구자인 퍼트남(Putnam)이 강조한 결속형 자본(bonding capital) 보다는 교량형 자본(bridging capital)¹⁶⁾의 확대를 통한 지지기반의 확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의 일반적인 목적과 온라인 활동의 목적은 결국 두 차원의 자원(resource) 활용 문제로 수렴될 수 있다. 즉, 네트워크 인프라(Network-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 자원 활용으로서 ICT 활용, 경제적 자원 동원으로서의 정치자금 모금이 튼튼한 기반으로 온라인 정당활동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ship(Network-Ship)이라 할 수 있는 인간 관계망과 정책망의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인적 자원 동원으로서의 지지자 유대 확대, 인적 자원 표출로서는 엘리트층원 그리고 정책 자원 결집으로서의 정책 채택 및 실현이 결국에는 정치 자원 현실화를 통해 득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모든 정당의 네트워크 전략은 가칭 ‘TCAHR 전략(Technology, Capital, Agenda, Human, Representative Strategy)’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의 디지털 전략이 본격화되기 전 초기 단계는 정보제공형 전략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¹⁷⁾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외 대부분의 정당들은 정당의 대외적인 홍보채널로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피파 노리스의 2000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1,000여개의 정당이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EU 회원국인 15개 국가의 134개 정당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온라인화 정도는 사회적 발달과 기술 발전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민주화의 정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16)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속형 자본이란 ‘우리 사람 챙기기’라고 할 수 있으며, 교량형 자본이란 다른 그룹의 사람들까지 연결하여 ‘우리’라는 개념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7) 정보제공형 정당의 온라인 전략에 대해서는 조희정(2010) 제3부 참조.

18)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정당을 분석한 또다른 연구에 의하면 중앙집권적인 정당 운영의 양태가 ICT 활용에도 반영되어 중앙당이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총괄하고 그 활용성이 높은 반면 지방 차원에서는 그 활용성이 떨어지

정당이 온라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정치에서의 고비용의 진입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과 그리하여 정당간 경쟁구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정당과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활성화되고 그만큼 정당의 응답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¹⁹⁾

다. 시민사회의 변화

제도 영역의 디지털 정치조직이 제도적 장애에 의해 오프라인의 경로의존에 의한 구조 변화가 어려운 편이라면, 비제도 영역의 디지털 정치조직의 경우는 ICT 반응성이 대단히 높은 유연한 조직이라는 특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제도 영역의 폐쇄성에 비해 대중의 폭넓은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거의 조직 공개에 가까운 조직방식 공개를 선호한다.

전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비제도 영역의 디지털 정치조직은 오프라인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몇 개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시작되어 온라인과 병행하고 있는 조직, 순전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조직 그리고 개인단위의 네트워크화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시작되어 온라인 활동을 병행하는 시민운동 조직의 경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INGO(International NGO)가 대부분이며, 주로 온라인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시민운동 조직은 기존의 NGO 의제에 더하여 온라인 고유의 의제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공유, 개인정보보호 절제의 이슈를 주제로 한 조직들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하여 비록 조직운동의 차원은 아니더라도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같은 연결망을 통해 개인의 네트워크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비제도 분야의 또다른 특징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오히려 중앙으로부터 정보 유입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또다른 중앙당의 지방 조직에 대한 통제의 수단과 같이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정당 내에서의 조직간 세력 구도가 ICT의 활용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Nixon · Johansson 1999: 146-147, 박진영 2001: 142에서 재인용).

19) 박진영(2001: 137)

첫째, 기존의 시민운동 조직의 경우 1999년 시애틀 투쟁이나 1994년 사과띠스타 투쟁을 기점으로 온라인 자원의 유용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성장중심적인 발전과 위로부터의 급속한 세계화에 대항하여 인권, 환경, 평등, 노동, 자본의 세계화 등과 관련된 국제연대의 시민운동이 인간중심적 발전과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성장하였다(김태수 2005: 205).

둘째, 온라인 활동조직의 경우는 브루스 빔버의 주변조직(peripheral organization)과 임의집단(ad hoc group)의 특징으로 나타난다(Bimber 2003: 20).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99년²⁰⁾을 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온라인 활용 조직을 일컫는다.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자유당(Libertarian Party)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자유당은 인터넷(DefendYourPrivacy.com)을 활용하면서 정책현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소통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기존에 자유당이 가지고 있던 1만개의 메일 주소를 바탕으로 릴레이 서신 발송 운동을 전개한 결과 자유당은 17만 1천개의 시민들의 메시지를 FDIC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당시 자유당원 수의 네 배가 넘는 것이었고 FDIC가 그때까지 받은 메일 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메시지였다.

결국 당국은 예정된 정책안을 철회하였으며 자유당원은 그 후 2000년 인구총조사 반대운동, 미군의 코소보 개입 반대 운동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이익집단에서 현안집단 그리고 이벤트 집단(event group)으로 발전되는 과정은 과거의 조직형태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조직의 경계와 구조가 점차 느슨해지고 서로 병행하여 작동하는 조직형태에서의 이질성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Bimber 2003: 47).

이들 집단은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치 권익의 주창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존의 자원을 많이 보유한 기득권 계층이 독점하던 정치적 권익 주창이 이들 조직에 이양된 것은 잠재된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치적 중요성에서

20) 1999년에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의 ‘고객알기 운동(Know Your Customer)’이 노출한 과다 프라이버시 정보 취득에 대해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집단운동이 발생했다.

는 도외시되던 영역인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 및 여론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1940년대 라저스펠트(Paul Lazarsfeld)의 제한적 미디어 효과론과 같이 이와 같은 활동이 직접적인 의제제거나 의제 형성과 같은 과정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른 유용한 가치에 대한 주목마저 무시될 수는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집단운동의 형태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비록 조직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네트워크 사회의 하나의 특징으로 개인의 네트워크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약한 유대에 의한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의제의 네트워크, 콘텐츠의 네트워크 그리고 온라인 사회운동조직과 유사한 임의조직 및 이벤트 조직 형성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주로 이슈를 생산해내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트위터 혹은 관계망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구성되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0년 이후 인터넷 참여는 공식화된 집단 중심의 참여방식에서 점차 개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참여방식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웹2.0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인터넷 참여기반은 점차 1인 미디어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류 미디어가 개인화된 미디어로 대체되고 있는 지금, 인터넷은 우리 자신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었다. 인터넷으로 뉴스와 정보, 문화를 찾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가 뉴스와 정보, 문화가 되려 한다(Andrew Keen 2010: 19).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제설정은 한 개인에 의해서도 가능해지고 개방적인 인터넷 아키텍처 구조에 기반하여 폭발적인 시민참여를 가져올 수도 있다. 김성태·최홍규(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생성, 파급된 의제들은 대부분 단 한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이원태 2010: 201-202).

이들 개인의 네트워크는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을 통해 끊임없는 이합집산을 속성으로 하며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자유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특징과 네트워크십의 특징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반영한다는 능동적 특징을 보인다. 개인의 네트워크화는 재난구제, 정치적 행동주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공유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제도 영역에서의 대응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2. 정치조직의 전략

가. 정부의 TAH 전략

정당이나 시민사회와 달리 정부의 디지털 조직 전략에서는(TCAHR 전략 가운데) 자본(capital)과 대표자(Representative) 전략은 불필요하지만 대신 아젠다 즉 정책 전략이 다른 분야의 전략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즉, 컨버전스 사회에서의 정부라면 당연히 개방적 기술 활용과 휴먼 네트워크 구축을 전제로 갖추어야 하지만 정부를 정부다운 디지털 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채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부의 디지털 조직 전략은 ‘TAH 전략(Technology, Agenda, Human Strategy)’이라고 부를 수 있다.

〈표 4-6〉 정부 TAH 전략의 특징

구분	내 용	
자원	네트워크 인프라	1. Technology － 텍스트(스프레드시트), 이미지(비주얼 혹은 버추얼 서비스),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통한 사용자와의 접점 확대 － DB 구축 및 고도의 검색(주제별 검색도 가능), 색인 서비스 제공 － 매시업, 오픈 API 등 개방형·융합형 기술 활용 － SNS 서비스 연계(소통, 공유, 연계, 참여):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플리커, 링크트인, 블로그(RSS), 공개 이메일 수집, 구글(ADwords, Reader, Buzz, Docs) 사용을 통한 채널 다양화 및 신속한 대응 － 모바일 연계 서비스, 자체 어플리케이션 제작 － 정책 문의 전담 전화 서비스 － SDK로서의 정부 － 공공정보 재활용 － 데이터의 실용성과 투명성 개선, 능동적 정보 제공

구분	내 용	
자원	네트워크십	2. Agenda(Policy) - 게시판, 댓글, 투표, 포럼, 서명, 여론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개방적인 의견 수렴 - 정부와 시민간 혹은(국내외) 시민간 네트워크 형성 - 다양한 정책 공모를 통합 집단 지성 창출 - 정보공유(실시간 브리핑), 정책개발공개, 투명성 확보(예산내역 공개), 공공자료 개방 정책 - 열린 문제 해결 - 오픈 표준 - 미들오피스로서의 정부, 부처간 협력 - 백오피스 고도화 -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관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
		3. Human - 다국어 지원 서비스 - SNS를 통한 상시적인 약한 유대 유지 - 취약전 아동, 여성, 다국어 사용자, 청각 장애인 대상 광고와 정보제공 - 참여 유도 온라인 게임 - 리더십 - 수요자 중심 서비스 - 시스템 구축에 관료뿐만 아니라 개발자, 학자, 컨설턴트, NGO, 시민이 참여하는 e-거버넌스 형성 - 커뮤니티 구축모델
작동 방식	소셜 네트워크 방식	
구조	오픈 구조, 연계구조, 분산적 구조	

1) 네트워크 인프라 전략

컨버전스 사회에서의 디지털 정치조직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는 텍스트(스프레드시트), 이미지(비주얼 콘텐츠), 가상(비추얼 콘텐츠), 동영상 등 매우 다양하다. 정부가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진일보하여 DB를 구축하고 및 좀 더 간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도의 검색(주제별 검색도 가능)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부 콘텐츠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열린 정부의 데이터는 매시업을 통해 자유로운 콘텐츠 혼합과 오픈 API 등 개방형·융합형 기술제공을 통해 데이터 파생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표준이 확립되어야 하고 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재)활용의 법적 근거 및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기술의 발전수준만큼 중요한 것은 공공데이터의 실용성과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능동적인 정보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과 보유 목적, 단계별 활용의 정도 등이 상세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부 2.0서비스는 또한 SNS 서비스를 연계하여 소통·공유·연계·참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플리커, 링크트인, 블로그(RSS), 공개 이메일 수집, 구글(ADwords, Reader, Buzz, Docs) 사용 등 다양한 서비스와 공개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데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모바일 진화환경을 배경으로 모바일 연계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자체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대한 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것이 사실이다.²¹⁾ 즉 통상적으로 시장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SDK로서의 역할을 정부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네트워크십 전략

(1) 아젠다(정책) 수립 및 수렴 전략

정부 2.0서비스에서는 게시판, 댓글, 투표, 포럼, 서명, 여론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21) 미국 뉴욕시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시민들이 제안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경진대회를 주최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서 2009년에만도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고 지리정보, 주차장 정보, 범죄지도, 도시에 관한 어플리케이션 포털 등의 다양하고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후 여러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방법이나 어플리케이션의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 전형(stereotype)이 되었다(nycbigapps.com 참조).

개방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물론 이와 같은 서비스는 전자정부의 초기부터도 가능했던 서비스들이지만 앞서 제시한 여러 다양한 2.0기술이 참여와 의견수렴을 상대적으로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의 의견수렴과 참여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간 혹은(국내외) 시민간 네트워크 형성을 독려하는 기반이 된다. 그리하여 다양한 정책 공모를 통합 집단 지성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험이 현재에도 전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며, SNS를 활용한 상시적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정책개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을 창출하고, 기본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 정부 2.0 디지털 조직의 대표적인 아젠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린 문제 해결과정에서는 백 오피스(back office)의 재설계 및 고도화,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에서의 서비스 강화만큼 미들 오피스(middle office)²²⁾로서의 정부역할과 부처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중간자 이른바 미들 오피스로서의 정부는 프론트 오피스 기능 강화와 백 오피스 강화에 대한 논의의 틀을 뛰어넘어 정부를 국가사회 전체시스템에서의 미들 오피스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²³⁾ 미들 오피스로서의 정부는 개인의 활동 즉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갱신·변경하고 이를 정부가 공유하여 불필요한 개인의 행정활동을 줄여주는

22) 미들 오피스는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프론트 오피스는 현재 포지션을 체크하고, 거래를 일으키는 자금운용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하고, 미들 오피스는 독립된 부서에 의하여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및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백 오피스는 장부에 거래를 정리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금융분야에서 미들 오피스가 위험관리를 비롯하여 성과분석, 한도관리 등과 같이 전체적인 거래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과 같이, 정부도 대민/대기업 서비스에 있어 간접 처리의 경제성을 살펴서 전체적인 상황관리, 정보의 신뢰성 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중간자로서의 매개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선희 2008: 20).

23) 미들 오피스로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희(2008: 20-22) 참조.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갱신을 해당 기관, 사이트마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간자로서 관리하여 유관 분야에 이를 공유해 주고 동일한 신고를 중복처리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들 오피스로서의 정부는 사회 전체가 웹기반에서 돌아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정보 매개자 및 중간자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서비스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점은(앞서 제시한 제도적 수정 조건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공공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탑 에서 접수된 정보가 정부부처에서 수용 가능해야 하고, 정부는 이 정보를 민원인/민원기업과 관련된 기관으로 정확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해야 한다. 즉, 정부와 민간이 동일한 기술 기반에서 운영될 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최선희 2008: 22).

(2) 휴먼 네트워크 전략: 시민과의 협업을 통한 e-거버넌스 실천

정부 2.0 서비스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시민과의 협업을 강조한다. 미국의 datagov.ideascale.com과 영국의 Show Us a Better Way와 같은 서비스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며 특히 영국의 경우는 보다 나은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발자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 차원에서 공공정보와 민간 정보가 결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매시업 서비스를 위한 제안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a: 14).

네트워크십 형성에 있어서 다국어 지원 서비스나 SNS를 통한 상시적인 약한 유대 유지, 취약전 아동, 여성, 다국어 사용자, 청각 장애인 대상 광고와 정보제공 등은 기본적인 사용자 편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나아가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공공데이터 접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공공정보에 대한 호감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ICT 정보정책 추진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 구축이나 분산되어 있으

면서도 추진구조의 중심성을 확보한 추진구조만큼 또하나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이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ICT 분야에서의 리더십의 중요성은 다른 모든 자원의 활용과 구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핵심 요건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리더십은 위계적인 과거의 리더십을 ICT 정책공간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에 관료뿐만 아니라 개발자, 학자, 컨설턴트, NGO, 시민이 참여하는 e-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줄 아는 수평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십이어야 한다.

또하나, 전자정부이든 정부 2.0이든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부분은 새로운 서비스 전달에 맞는 커뮤니티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 서비스의 품질만큼이나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라는 가치가 중요해지는 만큼 시민들과 관계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나. 정당의 TCAHR 전략

1) 네트워크 인프라 전략

이제까지 네트워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정당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술자원이나 자본형성에 있어서 ICT가 매우 효과적인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술자원에 있어서는 메일뿐만 아니라 IRC와 같은 대화 서비스 그리고 위키 방식의 민주적 의견 수렴과 열린 정보제공 등의 웹콘텐츠, 텍스트와 동영상 등을 통한 정보제공과 브리핑 등은 다양한 기술활용의 기회를 늘리는데 확실히 효과적이다.

또한 주제별 검색이나 색인과 같은 서비스는 정보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플리커, 링크트인, RSS 서비스가 포함된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 정보제공 및 공개이메일 수집을 통한 정당의 외연확대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구글의 애드위즈, 리더, 버즈, 독스와 같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열린 정책구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기술자원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컨버전스가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연계서비스와 자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션을 제작하는 등의 현상은 정당의 네트워크 전략이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진짜 ‘자본’인 정치자금 모금 방법에 있어서는, 우편, 인터넷 बैं킹, 페이팔(Paypal) 뿐만 아니라 방문자의 블로그에 모금 배너를 설치할 유도하거나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념품 판매의 경우는 단순히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 로고 상품이나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계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모금 성공과 지지자 확보를 동시에 유도하는 파생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정치자금 모금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금된 정치자금의 현황이나 정당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정당운영을 통해 방문자의 정당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표 4-7〉 네트워크 정당의 TCAHR 전략의 특징

구분	내 용	
자원	네트워크 인프라	1. Technology — 웹(메일, IRC, 위키) 콘텐츠(텍스트, 동영상(링크 혹은 브리핑)) — 검색(주제별 검색도 가능), 색인 — SNS 서비스 연계: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플리커, 링크트인, 블로그(RSS), 공개 이메일 수집, 구글(ADwords, Reader, Buzz, Docs) 사용 — 모바일 연계 서비스, 자체 어플리케이션 제작 — 정책 문의 전담 전화 서비스
		2. Capital — 우편, 인터넷 बैं킹, Paypal — 블로그에 모금 배너 설치 — 기념품 판매: 단순 기념품뿐만 아니라 정당 로고 상품, 지역관광상품과 연계된 상품 등 전략적 판매를 통한 동원과 정치자금 모금 효과 획득 —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전략
	네트워크집	3. Agenda — 게시판, 댓글, 포럼, 서명,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단일의제정당(single issue party)

구분	내 용	
자원	네트워크십	4. Human - 다국어 지원 서비스 - SNS를 통한 상시적인 약한 유대 유지 - 젊은 유권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치교육과 미래 인적 자원 확보 - 취약전 아동, 여성, 다국어 사용자, 청각 장애인 대상 광고와 정보제공 - 당내 조직으로서 이슈별 그룹 구성 - 지역과 국제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 참여 유도 온라인 게임
		5. Representative
작동 방식	소셜 네트워크 방식	
구조	오픈 구조, 연계구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2008년부터 정당 사상 처음으로 휴대전화 당비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시스템의 경우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정액요금제를 쓰고 있을 경우에는 당비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2009년 12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당비납부신청서를 다운받아서 해당 시도당에 제출한 후에 휴대전화로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으로 민주당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번거롭다.

정치자금 모금은 홍보, 자원봉사와 함께 네트워크 선거운동의 핵심목표로써²⁴⁾ 미국 대선에서 맥케인이나 하워드 딘 등의 사례를 통해 더욱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당비 납부나 정치자금 모금의 용이성은 특히 기존 정치공간에 진출하기 어려운 군소정당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오바마 효과로 나타난 소액 다수 헌금의 위력이 강조되면서 헌금의 액수만큼 다수의 유권자를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온라인에서의 정치자금의 모금은 정치 부패를 일소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결

24) 조정관(2004: 84)

집시키며, 모금 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²⁵⁾

2) 네트워크십 전략

인적 자원확보와 의제수렴 등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십은 물질 자원에 이어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당의 경우는 의제(Agenda)와 인적 자원(Human Network)확대뿐만 아니라 대표자(Representative)를 충원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확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제 수렴 방법으로는 게시판, 댓글, 포럼, 서명,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웨덴 해적당의 포럼 사례처럼 독자적인 툴을 통해 좀 더 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현황을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으며, 대부분의 정당이 게시판에서의 댓글이나 온라인을 통한 서명과 여론조사가 비용이나 시간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잇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의 지지가 다양화되는 현상의 한 축은 스웨덴 해적당과 같은 단일의제정당(Single Issue Party)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유념해볼아야 한다. 기존의 정당이 다양한 유권자의 확보에 실패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온라인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출현하여 국제적 외연을 확대하면서 온라인의 액티비스트(activist)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적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소외된 계층이나 미래의 지지자를 포함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내 조직으로서 이슈별 그룹을 구성하기 편하게 한 다던가 인트라넷을 SNS를 통해 강화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정당과의 결속관계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적당이나 녹색당과 같이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연계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결국 네트워크의 핵심은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와 같은 관계는 정당의 중앙에서 위계적으로 조직하거나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유권자가 맺는 관계가 아니라 각 행위자 스스로 서로 관계를 적극

25) 조정관(2004: 84)

적으로 맺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시민사회의 TCAH 전략

1) 네트워크 인프라 전략

시민사회의 사회운동 조직이나 개인은 기술 활용에 있어서 정부나 정당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분히 실험적인 시도에 의해 여러 다양한 자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기술 활용 기회에 있어서 우월함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제도적 제약 속에 정당은 기술 활용에 따른 책임과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는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정부나 정당보다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민사회에서 기술 활용은 정부나 정당의 그것과 다른 하나의 가치를 대척점으로 제시한다.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을 기술표준으로 할 수 있는가의 쟁점이 그것이다. 이미 마이크로 소프트의 익스플로어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다른 브라우저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훨씬 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한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기술의 컨버전스가 진행되어도 기술 자체의 공유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기술에 대한 자유로운 가치가 정부나 정당에도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자원의 또다른 한 축으로 자본의 확보는 그다지 원활한 선순환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시집단이나 이벤트 집단 혹은 선거와 같은 이벤트가 진행될 때 정치활동조직의 모금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모금의 목적과 운용과정 공개에 대한 사항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모금의 목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모금의 운용방식에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표 4-8〉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TCAH 전략의 특징

구분	내 용	
자원	네트워크 인프라	1. Technology - 웹(메일(사용자들 스스로 릴레이 발송), IRC, 위키)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 검색(주제별 검색도 가능), 색인 - SNS 서비스 연계: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플리커, 링크트인, 블로그(RSS), 구글(Reader, Buzz, Docs) 사용 - 모바일 연계 서비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조
		2. Capital - 우편, 인터넷 뱅킹, Paypal - 블로그에 모금 배너 설치 -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전략
	네트워크집	3. Agenda - 게시판, 댓글, 포럼, 서명,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온라인 고유의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의제 부상 - 재난 구제, 정치참여, 저항, 다양한 문화활동 공유 - 기반 구축, 캠페인 생성 - 문화중심 아젠다가 지배적 - 사건이 곧 미디어
		4. Human - 다국어 지원 서비스 - SNS를 통한 상시적인 약한 유대 유지 - 시민 교육 - 이슈별 그룹 구성 - 지역과 국제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 분산적 거버넌스 - 풀뿌리 네트워크 조직 - 지역조직 완성, 리더 양성 - 개인의 네트워크 확대 - 탈중심성의 네트워크 -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작동 방식	소셜 네트워크 방식	
구조	오픈 구조, 연계구조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의 집합으로 인한 부조가 이루어지지만 이제는 단지 물질적인 모금이 아닌 재능기부와 같은 현상으로 전환되는 단계인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즉, 도움을 위한 물질적 부조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반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소셜 기부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부금까지 적립하는 소셜 기부 캠페인은 SNS의 하나인 잇글링(www.itgling.com)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2010년 10월 13일 ‘스토리 도네이션(Story Donation)’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은 이야기 자체를 기부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유익한 콘텐츠를 작성하면 사용자 한 사람당 500원의 기부금이 자동으로 적립된다.²⁶⁾ 즉, 단지 물질적 기부를 하고 끝나는 일회성의 구조가 아니라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는 1석 2조의 효과까지 거두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²⁷⁾

2) 네트워크십 전략

시민사회의 아젠다는 기존의 재난구제, 정치참여, 저항, 환경, 노동 등의 의제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저작권 등 온라인에서 새로이 문제가 되는 핫 이슈에 대한 의제가 부가되며 한편으로는 문화 중심의 아젠다가 매우 많다. 네트워크 공간의 핫 이슈인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저작권 문제 등은 사용자 본인의 문제이니 만큼 훨씬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우며 한편으로는 제도 영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다.

문화 중심의 아젠다가 많은 이유는 다분히 문화창출에 매력을 느끼는 세대변화와도 연결되는 특징이다. 앞서 모금활동에서도 문화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현재의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아젠다는 탈물질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상상력이 중요한 다양한 문화적 실험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느슨한 유대를 확장할

26) 이 기부는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27) 이와 같은 기부형태는 네이버의 해피빈 재단과 다음의 다음세대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형태이다.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데, 서로의 공유점을 이데올로기나 기타 가시적인 구획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향이나 다양한 가치관의 인정 그 자체에 찾는 것은 변화된 세대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컨버전스 사회에서는 사건이 곧 미디어가 된다. 즉 사람들을 집결시키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중심적 토론의 장을 조직하는 것은 이제 TV가 아니라 사건이 된다(미시카 2007: 161)

다음으로 휴먼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상시적인 약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지역과 국제 네트워크의 형성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열린 SNS²⁸⁾를 통해 해외의 사용자들이나 외국인들과도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언제든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의 구성은 비록 맥루한이 이야기한 지구촌 개념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에서의 공생을 위한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또다른 특징은 자기조직화방식의 적용이다. 이러한 자기조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2008년 미국 대선에서의 오바마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오바마 선거운동의 허브 역할을 한 마이보(MyBo)에서 구사한 전략은 선거운동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있는 개인들에게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후보를 위한 집회와 기금모임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탭스콧은 넷 세대에는 수동적인 시민이 아니라 정치인과 협력하며, 직

28) 페이스북 창립자인 주커버그의 말은 SNS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맥 사이트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커뮤니티나 미디어 사이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인맥을 형성하거나 미디어를 엄청나게 소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정보를 공유하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다. 기존 미디어는 모두 한 곳에 집중된 형태이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것은 탈중심화된 의사소통(decentralized communication)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에 사용하던 한 곳에 집중화된 방식보다 이런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얻고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Auletta 2010: 283).

접 나서서 정치인과 교류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정치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직접 참가하고자 하며, 정치인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치과정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Tapscott 2009: 460-461).

제3 절 정책결정과정의 변화²⁹⁾

1. 정책네트워크의 구조

정책학의 관점에서 컨버전스 사회에서의 변화는 정책결정의 주체가 전통적인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서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로 바뀌어가는 일련의 근원적 변화를 의미한다. 즉, 폐쇄적 · 위계적 · 비민주적 방식의 정책결정과정의 다양한 행위자를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네트워크로 대체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9〉 디지털 융합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주요 특성

구 분	내 용	소통 매체	비 고
개별성	각 노드를 차지한 개별행위자의 독립성 정도	마이크로블로그, 스마트폰	연결의 자율성
동시성	각 노드 간 정보전달의 속도	마이크로 블로그	실시간 소통 여부
복잡성	각 노드에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수	마이크로 블로그	허브의 다원성
상호작용성	각 노드간 커뮤니케이션의 빈도	SNS	모바일의 경우
이동성	각 노드의 위치 이동 가능 정도	마이크로블로그, 스마트폰	휴대 가능 여부

웹1.0 시대의 기술적 진화가 집중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구

29) 차재권 · 장우영 · 박정은(2010)의 연구결과 참조

조로 가져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면, 웹2.0 시대의 기술적 진화는 집중 vs. 탈집중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 전혀 새로운 분산화된 네트워크(distributed network) 조직에서의 정책결정을 전제로 한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에 의해 나타난 융합 서비스들은 전통적인 웹1.0 기반 기술이 적용된 일방향적, 서버 중심의 웹서비스에서의 행위자간 네트워크 구성형식과는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웹2.0 기술이 적용된 기존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형성되는 네트워크 구조와도 사뭇 다른 네트워크 형성 방식을 갖고 있다.

예컨대 트위터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팔로잉-팔로워 시스템(following-followers system) 형식을 갖고 있어 누구라도 팔로워가 되거나 팔로잉을 하면서 트위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 싸이월드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는 ‘일촌’ 혹은 ‘친구’를 통해 네트워크가 폐쇄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심홍진·황유선 2010,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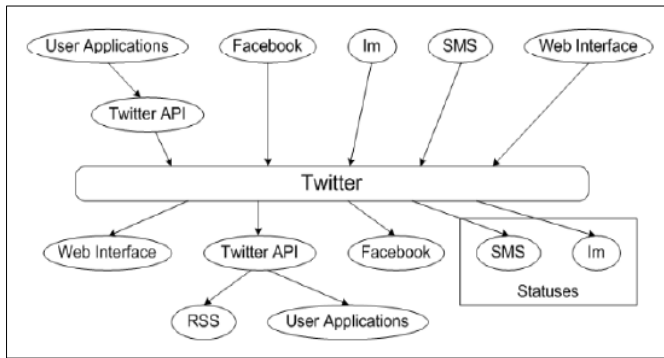
트위터 서비스에 의해 형성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조의 이러한 개방성은 트위터 서비스만이 지니는 트윗(tweet)의 동시다발성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다. 트위터는 기존 소셜미디어 서비스들과는 달리 다른 종류의 미디어와 연결된 상황에서도 다른 팔로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색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Krishnamurthy and Wills(2008)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위터 서비스에서는 웹상에서 업데이트한 트윗을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RSS feed(Twitter API),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교환해 볼 수 있다. [그림 4-8]은 트위터가 지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동시다발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트위터 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조가 갖는 개방성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분산성과 개별성 그리고 복잡성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네트워크 사회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복잡계 네트워크(Complex System Network)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웹2.0 시대의 핵심전제조건은 웹이 하나의 단순한 서버가 아니라 플랫폼의 구실

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O'Reilly(2005)는 웹2.0을 1)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아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2) 참여의 아키텍처, 3) 비용효과적인 확장가능성, 재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변형, 5) 단순기기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6) 집단지성의 활용으로 특징짓고 있다(최선희 2008, 8).

[그림 4-8] 트위터의 정보교환 경로



출처: Krishnamurthy and Wills(2008), p.20.

Di Maio(2007)는 web 2.0 시대의 도래가 어떤 다른 산업분야 보다도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기관이나 조직뿐 아니라 시민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intermediaries)이나 정부 밖의 공공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견했다.

‘플랫폼으로서의 웹’이 의미하는 바는 웹2.0이 지향하고 있는 참여, 공유, 개방의 이념을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개념의 핵심에는 ‘정보’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주체-객체 관계의 혁명적 변화가 내재되어 있다. 기존 웹1.0 시대에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생산해서 고객인 국민에게 배포해 주는 ‘정보 생산의 주체’였고 국민은 정부가 생산해낸 ‘정보’를 G2C 혹은 G2B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객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웹2.0 시대에는 웹자체가 개방되어 시민참여를 통해 공유되면서 국민 역시 정보의 생산과 배분의 주체로 역할하게 된 것이다.

최선희(2008)에 따르면, 거버먼트 2.0은 1단계 개방의 단계를 거쳐 2단계 참여의 단계로, 다시 3단계 융합의 단계로 발전해 가면서 정부의 역할은 정보의 생산 및 배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서 점점 정보 생산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 결국 정보의 생산과 공급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정책의제의 설정 및 정책대안의 선택, 나아가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에 매우 직접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보의 양과 질이 웹1.0시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인 바, 다른 정책과정에 비해 정보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형성단계의 질적 변화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웹1.0 시대를 포함한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정부는 정책의제 설정, 대안 선택, 정책결정의 전 과정에 있어 위계의 최정점에서 최종선택자로서의 역할을 했다(정부는 수집된 다양한 의제와 정책대안 중 자신의 정책목표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웹2.0 시대에는 플랫폼으로서의 웹에 쏟아진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집단지성의 작용을 통해 스스로 정제되어가면서 하나의 공동적 대안을 자생적으로 형성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 최종선택자로서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질 것이다. 대신 플랫폼으로서의 웹공간에 쏟아진 방대한 양의 정보에서 악화를 구축해 내고 집단지성이 합리적인 정책목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내는 기능이 더 강조될 것이다.

2.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정책결정과정을 구성하는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의 각 단계에서의 트위터, 스마트폰, SNS를 활용한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먼저 디지털 융합기술의 발전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집행된 정책의 평가 및 환류를 이끄는 주도층의 성격을 바꾸어놓는다. 트위터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디지

털 융합기술은 정책결정과정 중에서도 주로 의제설정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시사IN’, ‘야후’, ‘다음’ 등과 같은 국내의 주요 인터넷 매체나 포털들이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소재로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도 그만큼 트위터가 이미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의제설정 기능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위터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융합기술이 주로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정책을 형성, 결정, 집행, 평가, 환류 하는 나머지 정책 과정에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책대안을 탐색해 비용편익을 계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인 정책 형성 및 결정 단계와 결정된 정책대안을 실행에 옮기는 정책집행 단계는 해당 정책과정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정책과정에서 정책을 형성, 결정, 집행하는 단계를 주도하는 행위자는 공식적 참여자 중에서도 대통령, 의회와 같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주체들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행위자들의 결정과정을 보조하고 결정된 정책대안을 실행에 옮기는 행정관료 들이다. 이러한 전문성의 필요로 인해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의 핵심적 과정은 정책과정 중에서도 디지털 융합기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및 디지털 융합기술의 발전은 정책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탐색을 통한 정책 형성 및 결정 단계와 정책의 집행 단계에 있어 보다 다양한 원천이 활용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과거의 경험, 다른 정부의 경험, 과학기술과 이론에 의존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던 전통적 정책대안의 원천보다 보다 주관적, 직관적 방법에 의존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정책델파이 기법이 웹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디지털 융합기술이 지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역동성과 시간적 동시성의 장점은 브레인스토밍이나 정책델파이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외연을 무한히 확대시킴으로써 행위자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보다 객관적인 집단지성이 작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대안이 정책결정과정에 투입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책과정의 핵심적 단계에서의 디지털 융합기술의 활용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정부기관 트위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업무활동 보고와 관련 정보제공(언론보도 기사 업로드, 용어 해설, 법·제도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행정관리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웹1.0이나 이와 더불어 이벤트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거나, 일상적인 대화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SNS, 마이크로 블로깅,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융합기술의 발전은 이런 인터넷 기술이 지닌 의제설정과정의 제한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디지털 융합기술이 가져다 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동시성, 개별성, 상호성, 복잡성, 시간성의 확장은 디지털 노마드화된 개별 시민들이 정책의 제설정과정에서 사회문제를 공중의제 혹은 정부의제로 설정하는데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제설정단계에서의 주도권의 이동은 최근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트위터(twitter) 서비스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개별 시민들이 정책의 형성 및 결정 담당자인 정치인(주로 국회의원)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사회문제를 바로 정부의제화 하는 사례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2009년 온두라스의 한지수씨 사건이나 주요 정치인의 활발한 트위터 활용사례 그리고 각종 모바일 웹서비스를 활용한 정치인의 활동은 그와 같은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정책결정단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구체적인 공공정책의 결정 단계에 트위터를 활용한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디지털 융합환경의 조성이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국내의 경우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융합미디어의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정치인이나 각급 공공기관들이 마이크로블로깅이

나 모바일 SNS를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것을 정책결정에 반영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경우에도 중앙 정부부처에서 개발 중인 대부분의 스마트폰용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들이 기왕에 존재하던 정부 보유의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활용양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매우 드물게 최근 서울특별시가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시민여론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홈페이지에는 서울시의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모바일 웹을 통해 휴대단말기에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매우 개방적인 형태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웹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은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시정시책이나 시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특히 모바일 웹상에 개설된 토론방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³⁰⁾

다. 정책 집행단계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결정단계에서의 트위터를 활용한 정책과정 개입은 비교적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이른바 민원해결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트위터 활용은 상대적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한국판 트위터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의 일종인 미투데이(me2day)를 통해(me2day.net/theBlueHouse) 이러한 민원해결성의 정책집행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청와대 미투데이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활동이나 근황을 알리는 홍보성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투데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여론을 청취하려 노력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민 여론이나 아이디어 중에서 정책에 반영될 만

30)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www.seoul.go.kr/main/index.html) 참조

한 내용은 별도로 분류하여 해당 부처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국민 여론 수렴에 미투데이라는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미투데이 서비스가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바로 알려서 정부정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미투데이 서비스를 통해 바로 개진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의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평가 및 환류 단계 역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내 사례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 5 장 결론: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미래와 과제

제 1 절 연구결과

이상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권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1. 권력 주체별로 어떤 정보를 권력 자원으로 점유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경우, 디지털 컨버전스 이전과 이후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다. 아직까지 제도 권력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비제도 권력은 그러한 정보로부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정보의 가치 자체에서 비롯되는 불균형은 제도 권력과 비제도 권력의 권력행사와 그것의 성공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짐작된다.

2. 기술의 진화로 인한 컨버전스적 권력 수단의 등장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는 ‘권력의 경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제도 권력보다는 비제도 권력에게 유리한 이점을 제공하며, 후자를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 주체로 등장하게 한 근본적인 토대로 기능한다.

3. 그러나 컨버전스적 권력 수단은 제도 권력에게도 중요한 권력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도 권력의 경우 그 외에 기존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권력 자원과 권력 수단을 활용하여 컨버전스 시대의 그들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4.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은 비제도 권력을 권력의 주체로 등장시킴으로써 권력을 특정한 주체(즉 A 혹은 갑)로부터 탈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권력 주체 A는 권력의 행사에 앞서 선협적으로 규정받기보다는, 그것이 초래한 실질적인 결

과를 통해 권력의 주체로 호명되는 사후적인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권력의 관계는 권력행위자와 권력수용자라는 기존의 불평등한 관계(즉 A와 B의 관계)가 아닌, 권력행위자와 권력행위자 간의 관계(즉 A와 A의 관계)로 변화 가능하게 되었다.

5. 이러한 권력 주체의 변화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게 한다: “B(A)로 하여금 A(B)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끔 만드는 만큼의 A(B)의 능력, 혹은 자원(source)에 대한 점유와 수단을 통해 A(B)가 B(A)의 일정한 부문에 행사하는 양적인 힘”

6. 그러나 위의 가설은 어디까지나 비제도 권력 주체들의 권력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엄밀히 평가되어야 한다.

7. 권력 주체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컨버전스가 권력 관계에 미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정보화 시대’가 가져온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를 다시 하나의 네트워크로 결집시키는 ‘네트워크화된 집단화(Networked collectivization)’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보화 시대의 집단화와는 분명 차별화되는데, 왜냐하면 후자가 정보 생산자와 정보수용자를 구분하며, 또한 그러한 집단 내에서 맡은 역할 또한 위계적 질서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데 반해, 전자의 경우엔 저마다 다양한 권력 자원과 특수화된 권력 수단을 보유한 개인들 저마다 다양한 권력의 주체이자,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정보프로듀서로서 네트워크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버전스 기술 진화로 인해, 이제 각 개인들은 자기 안의 무한한 자아의 형태들을 컨버전스 기기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을 변환시키며,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가 원하는 다양한 요구에 자신을 부합시키면서, 어떤 때는 정보의 생산자로, 어떤 때는 정보의 전달자로, 어떤 때는 소통의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낮에는 사진촬영기자로, 저녁에는 기자로, 밤에는 비평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8. 이렇게 본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비제도 권력 주체들을 권력의 주체로 등

장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원인은 특정한 권력 자원이나 특정한 권력 수단 때문이라기 보다는, 네트워크화된 집단화로 인한 ‘정보 공유’와 ‘연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 그러나 그러한 네트워크 내의 비민주성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예컨대 대표적인 모바일 SNS인 트위터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보단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하에서 작동되는 권력 역시 여전히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특성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 이는 차후 대안 세력 내부의 비판 기능과 전체적인 권력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10.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가져온 변화를 제도를 통해 수용하는 것은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의 정착, 나아가 정보화 시대 이후 막중해진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명목상의 소통에 그치는 것을 넘어, 컨버전스적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된 비제도 권력의 요구와 비판을 생산적인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화된 루트’가 마련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11.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은 감시권력으로서의 속성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비제도 권력은 컨버전스적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도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 권력 역시 컨버전스적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 권력의 감시권력화로의 변환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컨버전스적 네트워크는 소수로 하여금 다수를 감시하는 데 있어 유리한 ‘권력의 경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2. 종합적으로 말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로 인해 권력 주체가 특정한 주체로부터 탈구되었다는 점에서 권력 관계의 수준에서는 수평적이고 민주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가능태’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권력은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컨버전스는 단지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줬을

뿐, 그 결과까지 보장해주진 않는다.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기에 앞서 일어난 이러한 권력 관계의 변화가 그 결과에 이르러서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아가 그로 인해 권력이 재생산되는 권력 구조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권력을 둘러싼 쌍방의 대화와 소통, 그리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3. 지금은 어디까지나 디지털 컨버전스 시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일 뿐이다. 과거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는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컨버전스 사회가 이 중 어떤 방향성에 따라 발전하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중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제 2 절 시사점

1. 제도 영역에서의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작동

첫째, 제도 권력의 작동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시민 주체들의 형성으로 인해 많은 경우 비판과 견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할 것들이다.

둘째, 국가가 디지털 컨버전스적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국가는 감시의 주체가 될 수도, 소통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이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비제도 영역에서의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작동

첫째, 국가와 같은 제도 권력의 작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 탈근대 이후 정체성의 상실과 파편화되어가고 있던 개인은 점차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집단적 정체성과 능동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의 도래와 개별화된 네트워크로 인해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즉 상업적인 논리에만 좌우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공유될 것이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유리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디지털 컨버전스 권력의 미래와 과제

큰 틀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권력 관계 및 그에 관한 인식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권력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들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인 수준에서 사회의 변화와 갈등을 수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제도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 있듯이 한국의 경우 국가가 디지털 컨버전스 하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민사회 내의 무수한 권력들의 요구를 제도화된 루트를 통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컨버전스 사회로 인한 권력 관계의 변화를 제도 권력 스스로가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적 권력과 관련된 제도화가 부재한 이유를 단순히 기성 집단의 자기 이해관계 때문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주로 사적·일상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이를 공적인 제도를 통해 포섭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적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자칫 권력의 남용과 간섭으로 해석될 소지 또한 다분하다. 이것은 결국 주로 하위정치, 즉 일상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관심을 상위정치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시키는가와 연결된다.

둘째,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 권력으로 하여금 많은 시민들을 권력의 주체로 인정할 만한 체계적인 조직화가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저마다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체계화하고, 정책적인 수준의 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³¹⁾ 한 마디로 말해 사적·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비제도 권력들 간의 소통과 대화를 보다 생산적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이끌어 낼 수 있

는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회침투이론에 따르면 자기노출 혹은 자기개방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들 간에는 높은 신뢰가 형성되고, 민주적인 관계로 발전된다(Altman · Taylor 1973). 컨버전스 사회로 인해 시민들 간의 자기노출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물론 자기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도 없진 않겠지만, 자기노출과 개방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자발적 네트워크가 시민사회 내에 자리 잡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도 적용 가능하다. 정보화 이후 정부가 이전보다 정보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사회에 다가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시민사회에 자기를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민주적인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면,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컨버전스 사회의 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첫째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져온 변화를 아직까지는 과대평가해서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체 시민 중에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져온 수많은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류는 아직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산업사회의 유산이라고 할 TV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이제영 2006; Jerit *et al* 2006).

둘째, 기술 · 경제적 변화가 시민사회적 수준의 변화를 늘 앞서간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한다. 시민사회적 변화가 기술 · 경제적 변화를 따라갈 경우 ‘전문성’의 비중과 중요성은 낮아지겠지만, 기술 · 경제적 변화가 다시 시민사회적 변화의 수준을 추월할 경우 ‘전문성’의 비중은 다시 증대될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해결해야 할 영원한 과제인 지도 모른다.

31) 한편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정당과 이익단체의 권력당사자로서의 존재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Altman, Irwin & Taylor, Dalmis A.,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olt McDougal, 1973.
- Bachrach, Peter & Baratz, Morton. S., *Power and Poverty: Theory and Practice*, Oxford Universtiy Press, 1970.
- Beck, Ulrich. trans by Cross, Kathleen. 2005. *Power in the Global Age*, Polity Press, 2005.
- Carnoy, Manuel & Castells, Martin.,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1(1):1-18, 2001.
- Carr, Nicholas., *Big Switch: Rewiring the World, from Edison to Google*, W. W. Norton & Company, 2008. 임종기 역, 「빅 스위치」, 동아시아, 2008.
-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Wiley-Blackwell, 2000. 김묵한 · 박행웅 · 오은주 공역,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 2003.
- Comm, Joel & Burge, Ken., *Twitter Power*, John Wiley & Sons Ltd, 2009. 신기라 역, 「twitter－140자로 소통하는 新인터넷 혁명－」, 예문, 2009.
- Dahl, Robert, “The Concept of Power”, *Behavioral Science* 2(3): 201-215, 1957.
- Darnton, Robert, “An Early Information Society: News and the Media in Eighteenth-Century Pari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5(1): 1-35, 2000.
-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Vintage, 1980.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 나남출판, 1991.
- Foucault, Micgel., trans by Burchell, Graham,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Palgrave, 2007.
- Galloway, Alexander. R.,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Cambridge, MIT Press, 2004.

- Giddens, Anthony.,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Volume 2 of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v. 2),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87. 진덕규 역, 「民族國家와 暴力」 삼지원, 1991.
- Goody Jack., *The domestication of the savage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Haewoon Kwak, Changhyun Lee, Hosung Park, and Sue Moon., “What is Twitter, a Social Network or a News Media?”, *19th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 WWW2010*, April 26-30, Raleigh, North Carolina, USA, 2010. <http://an.kaist.ac.kr/~haewoon/papers/2010-www-twitter.pdf>(검색일 2010. 5. 30).
- Hampton, Keith N, Sessions, Lauren F, Her, Eun Ja, Rainie, Lee., “Social isolation and new thchnology”,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9. <http://www.pewinternet.org/Reports/2009/18--Social-Isolation-and-New-Technology.aspx>(검색일 2010. 10. 20).
- Huges, Thomas P., “The Evolution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 in Bijker, Wiebe & · Huges, Thomas and Pinch, Trevor F.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 MIT Press, 1989.
- Jenkins, Henry.,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YU Press, 2006. 김동신 역,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2008.
- Jerit, J. & Barabas, J and Bolsen, T., “Citizens, Knowledge, and Information Enviro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2): 266-282, 2006.
- Keen, Andrew., *The Cult of the Amateur: How blogs, MySpace, YouTube, and the rest of today's user-generated media are destroying our economy, our culture, and our values*, Doubleday, 2009. 박행웅 역, 「구글, 유튜브, 위키피디아, 인터넷 원숭이들의 세상」, 한울, 2010.
- Levi, Margaret., *Of Rule and Revenue*, Chicago University Press, 1988.

- Lukes, Steven., *Power: A Radical View*, Macmillan Press, 1974. 서규환 역, 「3차원적 권력론」, 나남, 1992.
- Mann, Michael., *The sources of social power*(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Meeyoung Cha, Hamed Haddadi, Fabricio Benevenuto, and Krishna P. Gummadi., “Measuring User Influence in Twitter: The Million Follower Fallacy”, in *Proc. of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ICWSM)*, May 2010. http://an.kaist.ac.kr/~mycha/docs/icws2010_cha.pdf(검색일 2010. 8. 20).
-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New Media, Old Media: How Blogs and Social Media Agendas Relate and Differ from the Traditional Press”,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2010. <http://www.journalism.org>(검색일 2010. 10. 20).
- Poulantzas, Nicos., *State, power, socialism*, New Left Books, 1980.
- Qualman, Erik., *Socialnomics: How social media transforms the way we live and do business*, Wiley, 2009.
- Rossteutscher, Sigrid.,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Castiglione, Dario & Deth, Jan W and Wolleb, Guglielmo.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Rotenstreich, Nathan & Hart, Roderick P., “Easy Citizenship: Television’s Curious Leg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6(1): 109-120, 1996.
- Shirky, Clay.,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Penguin Press HC, The, 2008. 송연석 역, 「끌리고 쏘리고 들끓다」, 갈리온, 2008.
- Sproull, Lee & Kiesler, Sara.. *Connections; New Ways of Working in the Networked organization*, MIT Pres, 1991.
- Strange, Susan., *States and Markets*, Pinter, 1988.
- Weber. Max. trans by Fischhoff, E.[and others], G. Roth & C. Wittich. eds. *Economy and society vol. 1*, Bedminster Press, 1968.

- Wolf, Martin., “Will the Nation-State Survive Globalization?”,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178-190, 2001.
- Wolleb, Guglielmo., “Introductio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astiglione, Dario & Deth, Jan W and Wolleb, Guglielmo.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강명구, “정보민주주의와 정보공개: 전자감시사회에서 민주적 시민사회로”, 『한국 행정학회 · 한국언론학회 1996년도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46~64, 1996.
- 강원택, 『인터넷과 한국 정치: 정당 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집문당, 2007.
- 김미경,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정보공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203~220, 2008.
- 김민호 · 김정준,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공법학연구』 8(3): 443~462, 2007.
- 김상배, “네트워크 지식국가론: 정보화시대 국가변환의 개념화” 『국제정치논총』 46(4): 7~29, 2006.
- _____, “인터넷 권력을 해부한다”: 김상배 엮음.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2008.
- _____, 『정보혁명과 권력변화』, 한울, 2010.
- 김태우, 『미코노미: 웹2.0과 플랫폼 경제학』, 한빛미디어, 2008.
- 내가영, “모바일 SNS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와 만족감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 류춘렬, “컨버전스와 사회 변동”: 유재천 외 공저, 『디지털 컨버전스』,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 삼성경제연구소(SERI), 『SERI 경영 노트』 53, 2010a.
-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12&pubkey=db20100429001 (검색일 2010. 10. 22).
- _____, 『SERI 경영 노트』 75, 2010b.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12&pubkey=db20101007001>(검색일 2010. 10. 19).

안종묵, “디지털컨버전스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관한 고찰: 이동전화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6(2). 101 ~ 127, 2008.

윤석민, “컨버전스 미디어의 수용과 이용: 이동전화의 경우를 중심으로”: 유재천 외 공저, 『디지털 컨버전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윤성이 · 송경재, 『디지털 컨버전스 세대의 정치의식과 시민참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이재열 · 송호근, 『네트워크 사회의 구조와 쟁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이재영,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소비자 매체 이용행태 유형”, 『주관성 연구』 13: 107 ~ 141, 2006.

장원석, “전자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7(2): 81 ~ 99, 2004.

전재성, “동아시아 구성적 지식질서와 지역정체성의 변환”: 김상배 엮음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2008.

조남재, “디지털 컨버전스 의미의 고찰과 e-Business의 미래 연구방향”, 『e-비즈니스 연구』 10(4): 105-127, 2009.

조대엽, “지식정보사회의 지식정치와 과학기술운동”, 『정보와 사회』 1: 145 ~ 166, 2000.

조희정, 『네트워크 사회의 정치와 민주주의』,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조희정 · 강원택, 『디지털 정치조직의 변화와 e-거버넌스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차재권 · 장우영, 『디지털 정치조직의 변화와 e-거버넌스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최민재 · 양승찬,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저널리즘』, 한국이론재단,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해외콘텐츠시장조사(지식정보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http://www.wecon.kr/sub/contents/CMContent.srt?method=view&TYPE_ID=34&CONTENT_ID=1116&MIG_INFO=(검색일 2010. 6. 20).

황주성 외 공저,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9.

‘트위터 선관위 규제 논란 가열’(연합뉴스 2010년 3월 10일)

‘트위터 스타는 낙선, 트윗질 안 하면 당선?’(오마이뉴스 2010년 6월 3일)

‘6.2지방선거 이번 트위터엔 어떤 일이 벌어졌나’(중앙일보 2010년 6월 3일),

‘2010 트위터 혁명’, 마지막 1시간의 승부(서울신문 2010년 6월 3일)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Ⅱ) 시리즈 안내

- 10-01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Ⅱ) 총괄보고서 (황주성, KISDI)
- 10-02 디지털 문화산업의 융합기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이종관, 성균관대)
- 10-03 전자책의 출현과 문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이정준, 성균관대)
- 10-04 매체변화에 따른 미의식의 변화와 컨버전스 시대의 미학적 특징
(김성도, 고려대)
- 10-05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철학적 고찰 (이동후, 인천대)
- 10-06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자기조직화 원리의 이해 (황주성, KISDI)
- 10-07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정치권력 연구 (류석진, 서강대)
- 10-08 컨버전스 세대의 정치의식과 시민참여 (윤성이, 경희대)
- 10-09 디지털 정치조직의 출현과 e-거버넌스의 미래 (조희정, 숭실대)
- 10-10 융합 환경에서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와 전망 (차재권, 동의대)
- 10-11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정치담론의 특성 (이원태, KISDI)
- 10-12 컨버전스에 따른 경제 활동 및 산업 구도 변화 연구 (조남재, 한국경영정보학회)
- 10-13 디지털 컨버전스와 프로슈머의 행태 변화 및 전망 (김진우, 연세대)
- 10-14 컨버전스 세대의 등장 및 경제활동 특성 연구 (김연정, 호서대)
- 10-15 디지털 컨버전스가 미디어 활용 서비스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현수, 한국경영정보학회)
- 10-16 컨버전스 경제에서 가상현실 기술의 의의와 산업구조 변화
(손상영, KISDI)
- 10-17 융합문명의 도전과 응전 (김문조, 한국사회학회)
- 10-18 디지털 사회의 일상성 탐구 (김종길, 덕성여대)
- 10-19 사회문화적 융합의 동역학 (장용석, 연세대)
- 10-20 융합적 사회질서의 심층 분석 (유승호, 강원대)
- 10-21 새로운 소통합리성과 인본사회화 과정 (정국환, KISDI)

- 10-22 디지털 컨버전스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적 의미와 문화적 특성 (이호규, 동국대)
- 10-23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김경희, 한림대)
- 10-24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컨버전스와 디버전스 (안민호, 숙명여대)
- 10-25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 변화와 전망
(박태순, 미디어전략연구소)
- 10-26 모바일 소셜미디어에서 유력자(influentials)의 역할 (이원태, KISDI)
- 10-27 디지털 컨버전스의 미래 이슈와 미디어 정책 (디지털 컨버전스 미래포럼)
- 10-28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10대 정책아젠다 (모바일 인터넷 포럼)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I) 시리즈 10-07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정치권력 연구

2010년 11월 일 인쇄

2010년 11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경기도 과천시 용머리2길 38(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 쇄 인 성 문 화

ISBN 978-89-8242-808-1 94320

ISBN 978-89-8242-801-2 (전28권)
